

국제 ODA 동향

(2008. 11)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ODA 토포픽

- | | [Page] |
|---|--------|
| <input type="checkbox"/> ODA 역사를 통해 본 채무구제와 시사점 | [2] |
| ◆ 국제사회의 채무구제 시작 배경 및 현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한국경제 성장기 차관의 역할 | [15] |
| ◆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 초기 차관 도입정책, 사례 및 도입 성과 정리 | |

ODA 단신

- | | |
|---|------|
| <input type="checkbox"/> OECD DAC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포럼 주요 내용 | [37] |
| ◆ '08년 8월 아크라에서 개최된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포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정리 | |
| <input type="checkbox"/> 2008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요 | [42] |
| ◆ '08년 개최된 KOAFEC의 두 번째 장관급 회의 내용 및 KOAFEC Seoul Initiative 내용 소개 | |
| <input type="checkbox"/> JBIC, '쿨 어스 파트너십'에 따른 첫 번째 기후변화대책 엔차관 공여 | |
| ◆ JBIC의 기후변화대책 관련 첫 번째 프로그램 차관 제공 내용 소개 | [45] |

ODA 자료

- | | |
|--|------|
| <input type="checkbox"/> 2007년도 우리나라 ODA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 [48] |
| ◆ '08년 OECD DAC 앞으로 통보된 우리나라 ODA 통계(확정치) 분석 | |
| <input type="checkbox"/> '엔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통보 결과 분석 | [56] |
| ◆ '엔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통보 결과 분석을 통해 원조사업의 구매 방식, 입찰 결과 등을 정리 | |

EDCF 소식

- | | |
|--|------|
| <input type="checkbox"/> 2008년 3/4분기 EDCF 소식 | [61] |
| ◆ '08년 3/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08년 9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 |

ODA 토포픽 1

ODA 역사를 통해 본 채무구제와 시사점

【요약】

- 채무구제는 무분별한 원조와 수원국의 정책부재가 초래
- 다자간 채무구제를 통해 고채무빈국(HIPC)의 현가기준 채무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경제성장의 동반없이는 채무구제 되풀이 예상
- 고채무빈국에 대한 채무구제시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채무탕감과 채무재조정 폭을 차별적으로 지원 필요
- 다자간 채무구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국가채권관리법의 개정 검토 필요

1. 채무구제의 현황 및 한계성

□ 채무구제¹⁾ 현황

- 채무구제는 “전통적 채무구제 → HIPC Initiative²⁾ → MDRI³⁾”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수원국의 채무 감당능력(Debt Sustainability) 제고를 목표로 함
- '08년 9월 발표된 World Bank와 IMF의 'HIPC Initiative와 MDRI 진행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속된 채무구제 노력으로 HIPC Initiative상 Decision Point 도달 33개 국가의 채무규모가 '07년 현가기준 1,170억불에서 134억불로 축소되고 있음

- 1) 채무구제(Debt relief, Debt reorganization)는 채권자가 차관 잔액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발생하는 채무탕감(Debt forgiveness, Debt cancellation), 원리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해주는 채무재조정(Debt rescheduling), 채무국 정부가 민간채무를 사들이도록 무상원조를 공여하는 채무환매(Debt buyback)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2) **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Initiative**(고채무빈국 채무구제 방안) : IMF, World Bank, 파리클럽 등을 중심으로 1996년부터 시행된 고채무빈국에 대한 채무구제 방안
- 3)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다자간 채무감축 방안) : IDA(World Bank), IMF, AfDB, IaDB 등 4개 다자금융기관이 HIPC Initiative CP 도달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구제의 최종단계. 2006년부터 시행중

□ 실질적 경제성장이 관건

- 채무구체의 원인이 1950 ~ 70년대 무분별한 국제원조의 실패로 성장없이 빚만 증가한데 따른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 외채부담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하여도 실질적인 경제성장의 동반이 없는 한 채무구체는 되풀이 될 것
- 이런 가운데 현 HIPC 41개국 중 34개 나라가 소재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UN이 추진 중인 절대빈곤 감폭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⁴⁾은 채무구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숙제를 던지고 있음

2. 원조의 역사와 채무구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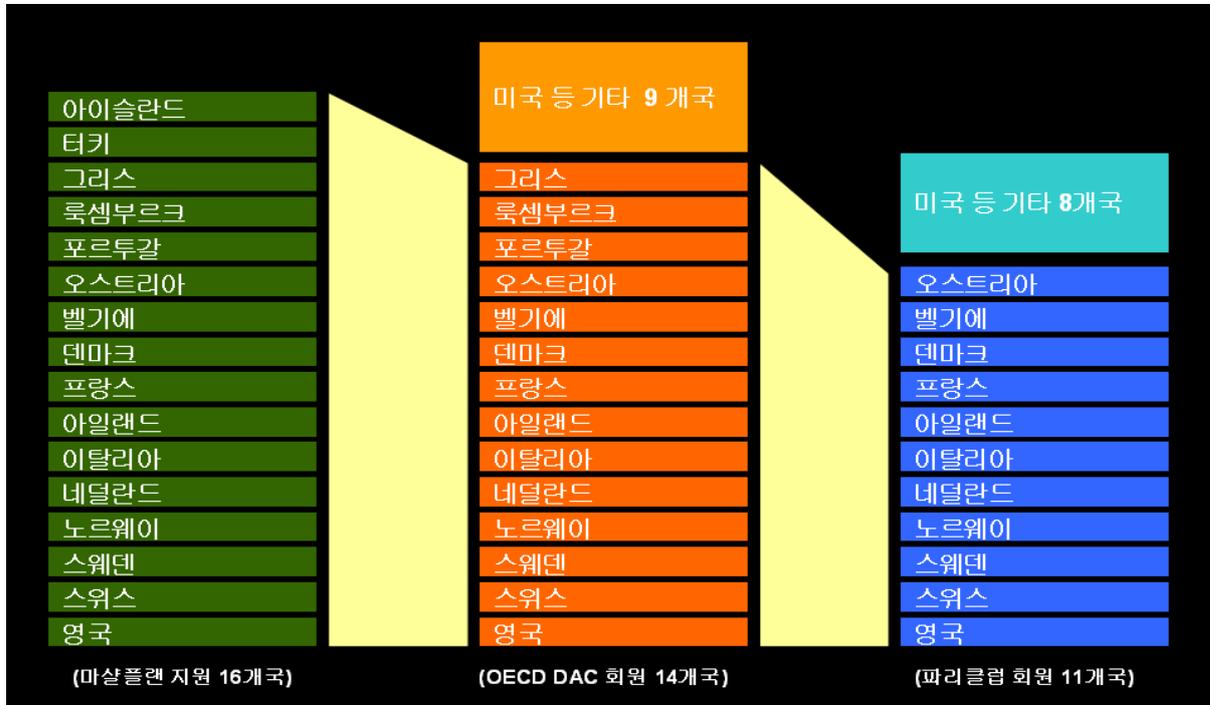
가. 개발원조의 시작(1950년대)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전후 새로운 시장 개발이 필요했던 미국은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서유럽 16개국의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
 - 동 국가들은 마샬플랜을 통해 조달된 125억불의 자금으로 4년 동안 36% 성장
- 마샬플랜 지원국들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각국 평균 10억불 미만의 금액으로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 마샬플랜 지원국 중 아이슬란드와 터키를 제외한 14개국이 지금의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며,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을 제외한 11개국이 現 파리클럽의 종신회원임
 - 마샬플랜 지원국의 빠른 전후 복구는 40년이 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가기준 1,170억불의 외채를 보유⁵⁾하게 된 HIPC국가와 대조를 이룸
 - HIPC 국가의 취약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사회적 불평등 등 경제 외적 요인이 간과됨⁶⁾

4)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8. p.4

5) IDA, IMF(2008) HIPC Initiative & MDRI - Status of Implementation, p.30

마셜플랜 지원 서유럽 16개국의 원조국 전환



나. 빛에 의한 성장(1960 ~ 1970년대)

- 전후복구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은 1960~70년대 주로 과거 식민통치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원조 지원
- 1960~70년대는 정치적·경제적 독립을 열망하는 신생독립국들이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IDA, UNDP, OECD 등 개발원조의 주요 국제개발협력기구들이 등장하는 시기
- 당시 신생독립국들의 수출품은 광물자원, 농산물 등 1차상품이 70 ~ 90%였던 반면 수입의 50 ~ 60%가 공산품으로 구성,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수입대체 산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에 몰두⁸⁾
 - ⇒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외채 도입, 반면 인프라 투자 빈약

6) Jeffrey D. Sachs는 성장의 필수 요인으로 제도적 기반, 양호한 지리적 입지, 거버넌스, 사회적 평등, 시장에서 통하는 혁신 등을 꼽았음("The End of Poverty"(2006, p.56-66))

7) 주동주(2008).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p.38-39

8) Tim Allen & Alan Thomas(2000), Poverty and Development into the 21st Century, p.294

- '65 ~ '73사이,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은 각각 3.6%, 4.6%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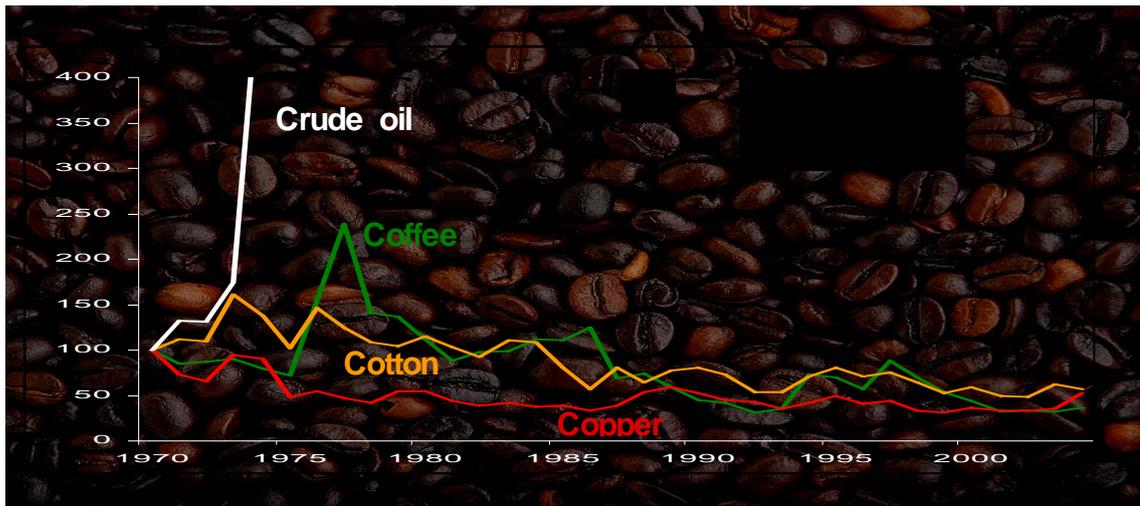
1인당 GNP 성장률(1965 - 1997) (%)

국가그룹	1965 - 73	1973 - 80	1980 - 86	1996 - 97
저소득국	3.6	2.4	4.0	2.8
중소득국	4.6	2.4	0.1	3.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3.0	0.1	-2.8	1.2
동아시아(중국포함)	5.4	4.4	6.6	5.6
남아시아	1.0	2.0	3.2	2.9
중남미	4.1	2.4	-1.6	2.7
고소득국	3.5	2.2	1.9	2.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1990 & 1998)

- 그러나 1~2개 상품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한 신생독립국은 무역을 통한 잉여자금 마련에 실패하고 더 많은 외채를 도입
- 특히, '70년대 2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30년간 계속된 1차상품의 가격하락은 단품위주의 수출구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오던 저소득국들에게 타격

연도별 상품가격 추이



주 : 1970년대 가격을 100으로 가정한 경우의 가격추이

자료 : World Bank(2005),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ountries

다. 개발의지 상실과 채무탕감의 시작(1980 ~ 1990년대)

□ '원조 피로(Aid Fatigue)' 시대의 도래

- '80년대 1차 상품 가격 하락과 더불어 OECD 국가의 고금리 정책과 보호 무역으로 인해 제3세계 외채문제 표면화
 - '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움 선언
- 또한 '90년대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최대 원조국이던 미국의 개발원조 유인 상실로 원조규모 축소
- 20여년의 개발이 성과없이 끝나고 개도국의 외채문제만 표면화되자 국제 사회의 개발원조 의지 상실 및 원조에 대한 회의론 대두

□ 채무탕감의 시작

- 파리클럽은 아르헨티나 채무재조정을 위해 '56년 첫 회동을 가진 후 현재 까지 403개의 동의안을 처리한 비공식 채권국들의 모임
- 파리클럽은 '88년 이전까지는 만기연장방식의 채무재조정만 다루었으나, 제3세계의 외채문제가 심각해지자 '88년 최초로 원금 탕감 시작('전통적 채무구제'의 시작)
 - 이후 런던조건, 나폴리 조건으로 변화하면서 '94년에는 채무구제폭을 67% 까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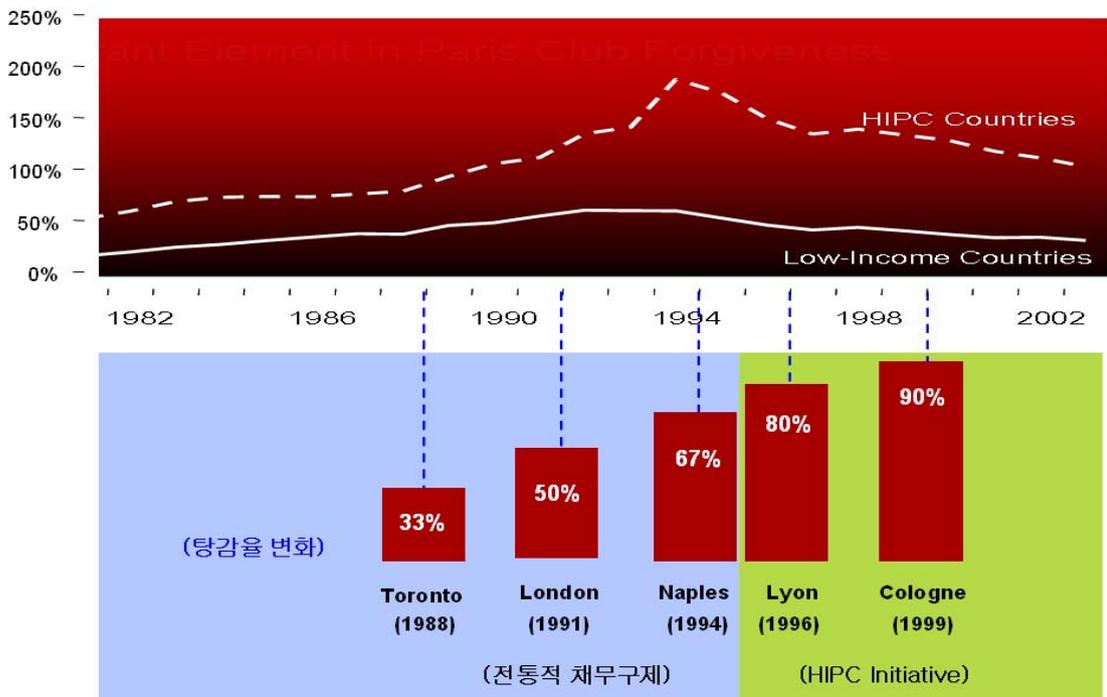
□ HIPC Initiative(고채무빈국 채무구제방안) 출범

- 다자간 원조 비중이 전체 ODA의 1/3수준까지 이른 상황에서 파리클럽의 개별 채무탕감만으로는 개도국의 실질적 채무감당능력 개선이 어려워지자 '96년 IMF, World Bank 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한 HIPC Initiative 출범
- 전통적 채무구제폭이 67%인데 비해 HIPC Initiative는 23%를 추가하여 현가기준 총 90%의 채무를 감면

HIPC Initiative의 다자간 채무구제 방식

- ▶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 채무재조정 (ODA경우, 탕감없이 만기연장)
- ▶ HIPC (Highly Indebted Poor Counties) 국가
 - **Pre-DP** (Pre-Decision-Point) 단계 : 통상 3년 동안 IMF 개혁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 기간 중 전통적 채무구제 방법인 나폴리 조건에 따라 현재가치 기준 67%의 채무를 감면받음
 - **DP** (Decision-Point) 단계: Pre-DP 기간 중 IMF 개혁프로그램 이행성과 및 잔존채무의 감당능력 평가를 통해 DP로 선정되면 **켈른 조건**(현재가치 기준 총 90%) 채무 탕감. (단, 최초 3년 동안은 경과적으로 최고 30%까지 탕감 후, IMF 개혁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CP (Completion-Point)** 도달 시점에서 잔여분을 모두 탕감. DP 국가 중 CP 도달전 국가를 Interim 국가, CP 도달국을 Post-CP 국가로 분류(붙임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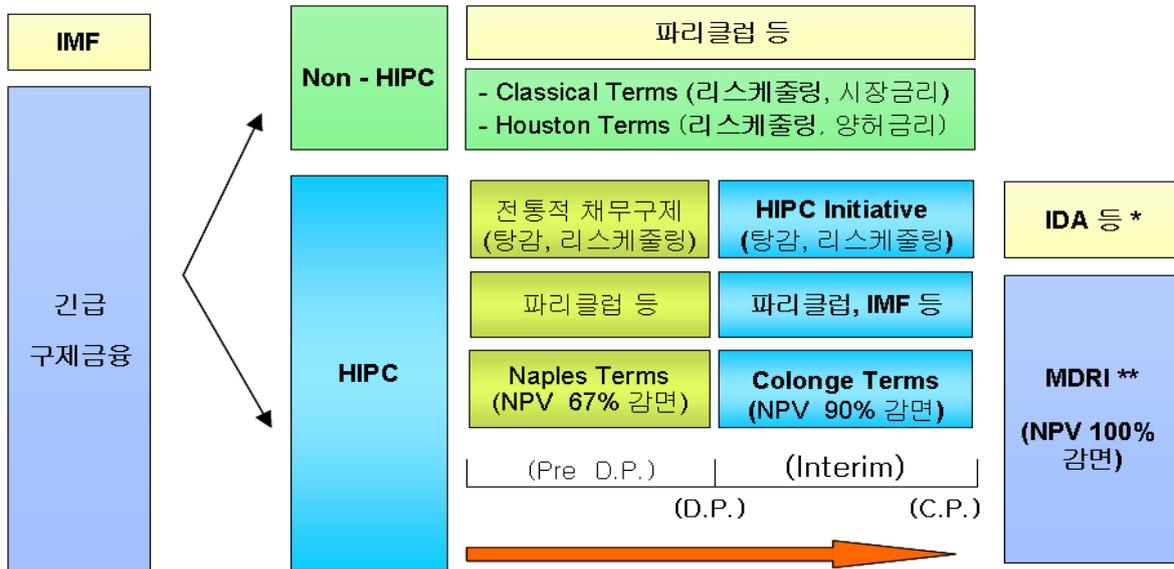
연도별 HIPC의 외채비중 및 채무구제 제도의 변화



주 : 그래프는 외채(현재가치 기준)/GDP 비율

자료 : World Bank(2005), "Debt Sustainability in Low-Income Countries"를 참고하여 시기별 채무감면제도를 매칭한 것임

다자간 채무구제 절차 및 내용



* 현재 IDA(World Bank), IMF, AfDB, IaDB 등 4개 기관 참여.

**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2006년 이후 시행), 모든 C.P. 도달 HIPC 에 대해 보유채권 전액 면제.

라.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현대(2000년대 이후)

□ MDRI(다자간 채무감축 방안)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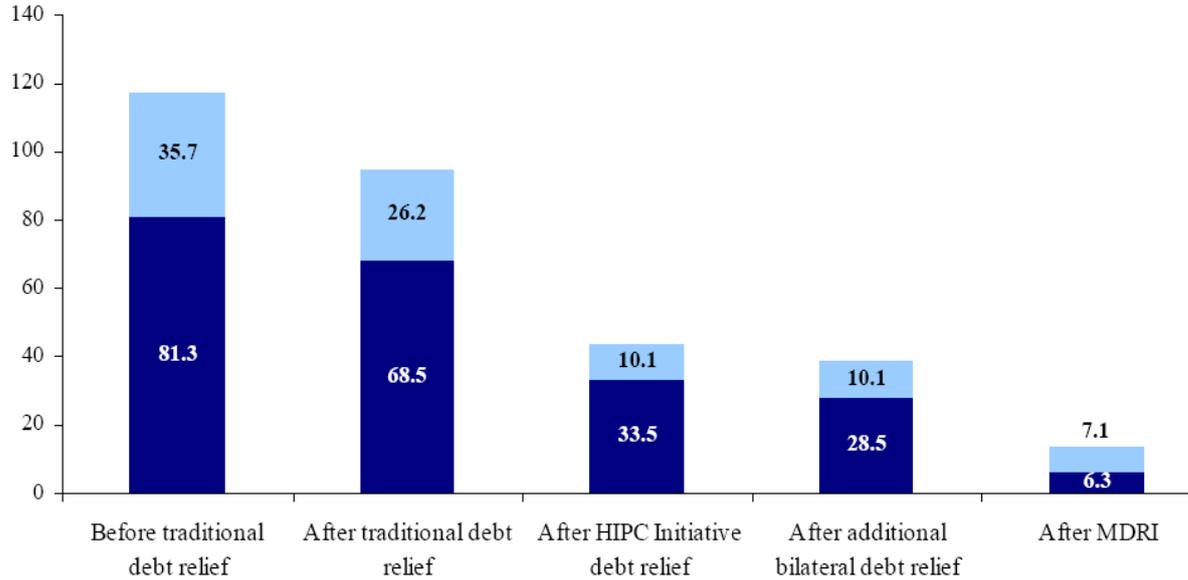
- HIPC Initiative 만으로는 UN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이 어렵게 되자, '05년 7월 스코틀랜드 G8 정상회담에서 모든 Completion-Point 도달국에 대해 추가적으로 World Bank, IMF, AfDB가 보유한 채무를 100% 탕감해 주기로 하고 '06년 시행에 들어간 제도
- '07년부터 IaDB가 합류하여 현재 4개 기구에 의해 운용

□ 전통적 채무구제, HIPC Initiative, MDRI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채무구제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채무관리능력 개선 불명확

- HIPC Initiative의 Decision-Point에 도달한 33개국의 외채가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1,170억불에서 134억불로 축소(2007년말 현가기준)
- 그러나, HIPC Initiative 최종단계인 Completion-Point에 도달한 23개국은 채무의 90%를 탕감받고서도, 부채고통(Debt distress)에 시달리는 나라가 '07 ~ '08년 불과 1년 사이에 4개국으로 늘었음

HIPC Initiative DP 도달국의 채무구제에 따른 잔존채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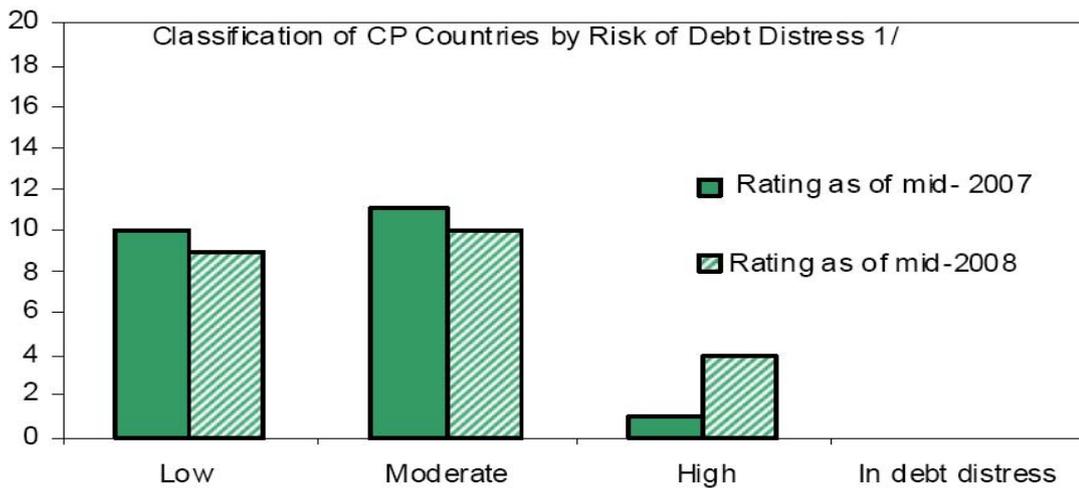
(십억불)



■ CP 도달 23개국 ■ DP도달후 CP도달이전 10개국

자료 : IDA, IMF(2008) HIPC Initiative & MDRI - Status of Implementation, p.30

HIPC Initiative 23개 CP 도달국의 부채민감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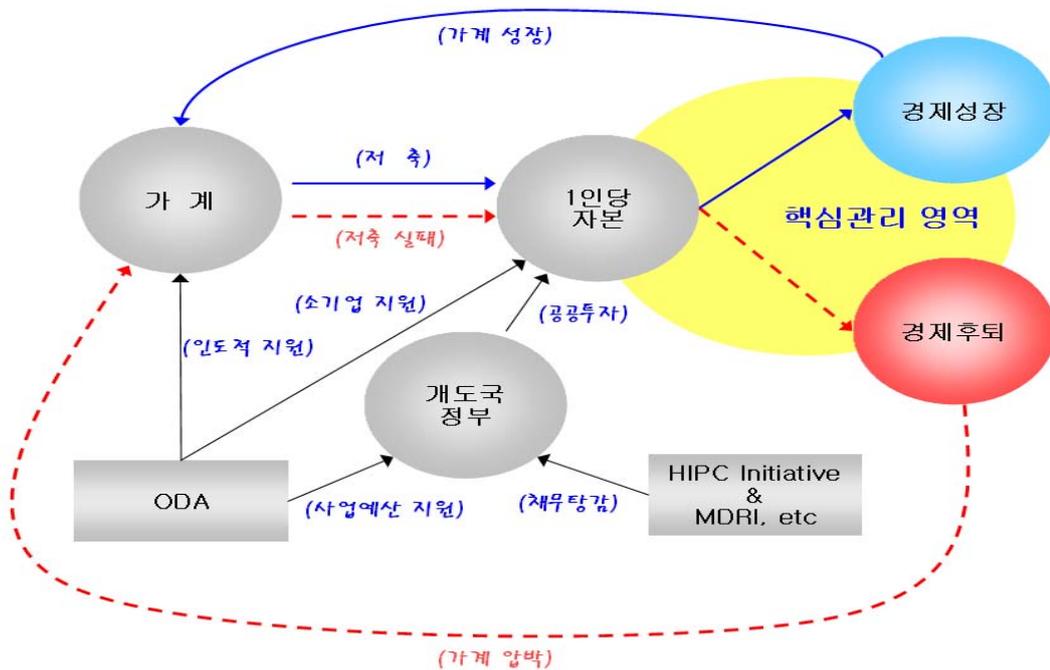
주 : Low, Moderate, High는 부채고통의 정도를 말함

자료 : IDA, IMF(2008) HIPC Initiative & MDRI - Status of Implementation, p.32

□ 성과중심 ODA로의 전환

- 미래의 원조는 개발일변도에서 벗어나 초등교육의 확대, 양성평등, 보건의료, 환경개선 등 다양한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될 것
- 빈곤탈출을 위한 ODA의 역할에 대해 Jeffrey Sachs는 자본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경제성장에 기여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 주장

빈곤퇴치를 위한 ODA의 역할구조



주 : Jeffrey D. Sachs(2006), The End of Poverty, p.249의 그림에서 핵심관리영역, 채무구제, 경기후퇴 씨클 등을 추가로 삽입

3. 채무구제 관련 현안

□ 현재가치(NPV) 기준 리스케줄링의 문제점

- 채무구제는 탕감(Cancellation)과 상환기간 재조정(Rescheduling)으로 구성, 이중 상환기간 재조정(Rescheduling)은 명목원금의 변동없이 상환기간 재조정을 통해 현가기준으로 감면

- 그러나 이것은 해당국의 경제성장이 동반되어 향후 국가의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도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된다는 가정이 전제되는 것임
 - ⇒ 1970년대 많은 개도국들이 원리금상환을 위해 추가적인 외채를 도입했던 사례를 상기할 때, 최빈국 앞 채무 재조정시 현재가치 기준 재조정정보보다 탕감을 우선 고려해야 함

□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의 HIPC 전략 가능성

- HIPC 국가들의 경우, HIPC Initiative와 MDRI를 통해 이미 채무가 현가기준 1/10 수준으로 줄어듦
 - 지난 3개월 사이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나라들 중 HIPC 국가는 없음
- 채무재조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국들이 신 HIPC로 전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 이들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세계경제 동반 하락속 국제금융기구의 재원고갈 우려 증대

- IMF 스트라스 칸 총재는 최근 긴급 구제금융 지원으로 가용한 재원이 2,0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언급
-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국면에서 채무구제의 지속 가능 여부 의문시
 - OECD는 미국, 유럽, 일본의 내년도 경제 성장치를 각각 -0.9%, -0.5%, -0.1% 수준으로 예상
- ⇒ 세계적인 경기침체속에 채무구제를 지속시킬 Trust Fund의 고갈 우려

4. 시사점

□ 채무구제와 경제성장의 동시 추진

- 과거 국제원조의 채무재조정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경제성장 없는 채무재조정은 시간을 버는 것일 뿐, 실질적 효과성이 없음
- 원조의 효과성, 성과중심 원조를 위한 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해 국제원조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노력 필요

□ 채무재조정시 차별적 지원 필요

- 채무재조정시 NPV 방식의 재조정보다는 탕감(Cancellation)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원

□ 다자간 채무구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법의 정비 필요

-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수원국들의 채무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DAC 가입 후 국제사회로 부터 다자간 채무구제에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받을 것임
- 러시아 연방을 제외한 모든 DAC 회원국이 파리클럽 종신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시 동등대우 조항(Comparability of Treatment)의 준수부담이 가중될 것
- 따라서, 파리클럽 등의 국제적 합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구제의 규모, 채무구제의 승인권한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료 : 1. Tim Allen & Alan Thomas(2000), Poverty and Development into the 21st Century
2. Jeffrey D. Sachs(2006), The End of Poverty
3. 주동주(2008). 국제개발과 국제원조
4. IDA, IMF(2008) HIPC Initiative & MDRI - Status of Implementation
5. OCED(2007),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7
6. OECD(2008),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2008

작 성 : 최 정 훈, jhchoy@koreaexim.go.kr

- 붙 임 : 1. HIPC 현황표('08년 9월 현재)
2. 파리클럽 채무구제 조건

<붙임 1>

HIPC 현황표(2008. 9월 현재)

HIPC 국가 (33개국)	Post-Completion-Point 국가 (23개국)																							
	<table border="0"> <tr><td>가나</td><td>볼리비아</td></tr> <tr><td>가이아나</td><td>부르키나파소</td></tr> <tr><td>감비아</td><td>사우토메프린시페</td></tr> <tr><td>니제르</td><td>세네갈</td></tr> <tr><td>니카라과</td><td>시에라리온</td></tr> <tr><td>르완다</td><td>에티오피아</td></tr> <tr><td>마다가스카르</td><td>온두라스</td></tr> <tr><td>말라위</td><td>우간다</td></tr> <tr><td>말리</td><td>잠비아</td></tr> <tr><td>모리타니</td><td>카메룬</td></tr> <tr><td>모잠비크</td><td>탄자니아</td></tr> <tr><td>베넌</td><td></td></tr> </table>	가나	볼리비아	가이아나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사우토메프린시페	니제르	세네갈	니카라과	시에라리온	르완다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말라위	우간다	말리	잠비아	모리타니	카메룬	모잠비크	탄자니아	베넌
가나	볼리비아																							
가이아나	부르키나파소																							
감비아	사우토메프린시페																							
니제르	세네갈																							
니카라과	시에라리온																							
르완다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온두라스																							
말라위	우간다																							
말리	잠비아																							
모리타니	카메룬																							
모잠비크	탄자니아																							
베넌																								
전통적 채무구제 진행국 (8개국)	Interim 국가 (10개국)																							
	<table border="0"> <tr><td>기니</td></tr> <tr><td>기니비사우</td></tr> <tr><td>라이베리아</td></tr> <tr><td>부룬디</td></tr> <tr><td>아이티</td></tr> <tr><td>아프가니스탄</td></tr> <tr><td>중앙아프리카공화국</td></tr> <tr><td>차드</td></tr> <tr><td>콩고민주공화국</td></tr> <tr><td>콩고인민공화국</td></tr> </table>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부룬디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인민공화국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부룬디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인민공화국																								
	Pre-Decision-Point 국가 (8개국)																							
	<table border="0"> <tr><td>네팔</td></tr> <tr><td>소말리아</td></tr> <tr><td>수단</td></tr> <tr><td>에리트리아</td></tr> <tr><td>코모로</td></tr> <tr><td>코트디브아르</td></tr> <tr><td>키르기즈</td></tr> <tr><td>토고</td></tr> </table>	네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리아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키르기즈	토고															
네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리아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키르기즈																								
토고																								

<붙임 2>

파리클럽 채무구제 조건

구분	전통적 채무구제 진행국(8개국)		HIPC 국가(33개국)	
	전통적 조건	휴스턴 조건	나폴리 조건	켈른 조건
적격기준	- IMF 개혁 프로그램 보유	○ 아래 조건 중 2개 이상 부합 - 1인당 GDP US\$ 2,995 미만 - GDP 대비 부채 50% 초과 또는 수출액 대비 부채 275% 초과 - 민간부채대비 공적부채 150% 이상	- IMF 개혁 프로그램 수행실적 - 과다부채 보유 - 1인당 GDP US\$ 755 이하	- Naples Terms 요건 충족 - IMF 개혁 프로그램 수행실적 - Naples Terms에 따른 탕감후에도 과다부채 보유
상환기간 (거치기간)	협의 산정	20년 (10년 이내)	40년 (16년)	40년 (16년)
상환방식	균등분할		할증분할	
금리	시장금리	양허금리	양허금리	양허금리
탕감률	-	-	현재가치 기준 67%	현재가치 기준 90%
실행방법	리스케줄링		채무탕감 리스케줄링	

주 : ODA Loan 만을 대상으로 작성

목차보기

ODA 토픽 2

한국경제 성장기 차관의 역할⁹⁾

【요약】

- 경제성장 초기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도입정책을 추진하였음
- 차관은 국내 저축과 투자간 격차 해소에 기여, 우리 경제의 양적성장과 함께 선진 기술의 도입, 생산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였음
- 특히 자금 도입과 관련 계획수립, 운용, 사업의 수행 및 상환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걸쳐 경제 주체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경제의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이러한 우리나라의 차관도입 성공사례는 최근의 국제적 유·무상원조 논쟁에 있어서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

I. 차관도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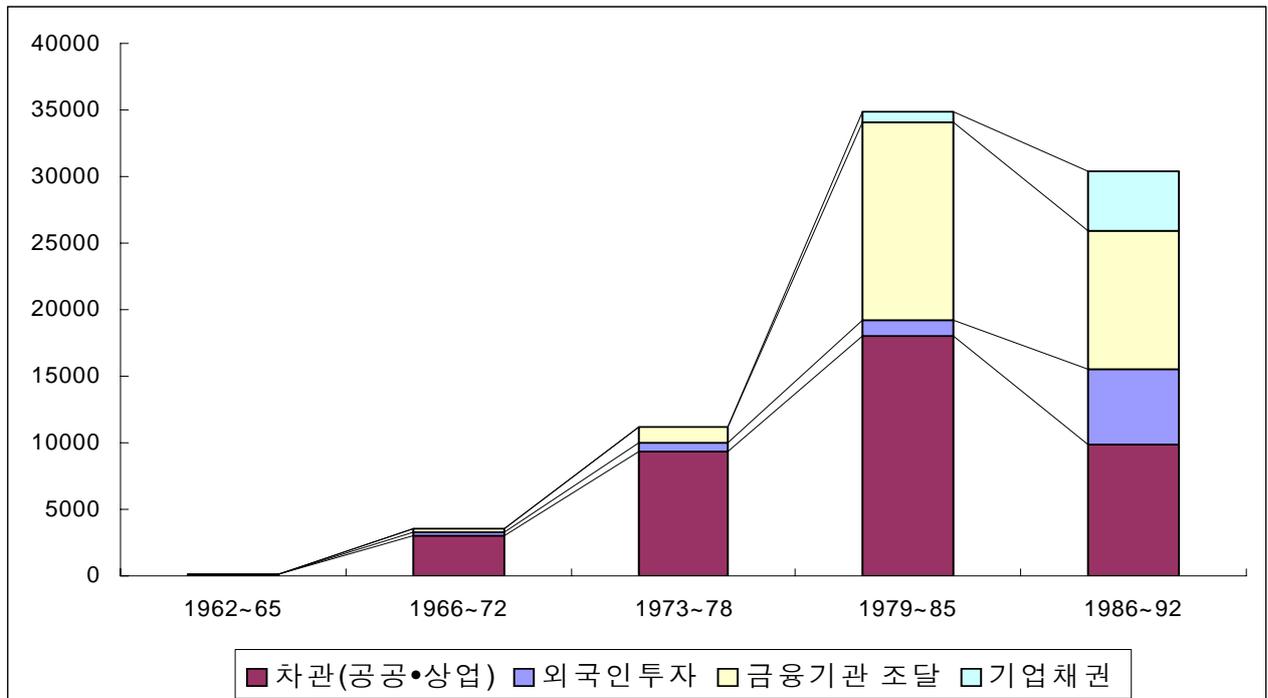
-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 30년간의 고도성장기 동안 우리나라가 도입한 외자총액은 802억불 수준임
 - 이중 차관(공공·상업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04억불(50.4%)수준임
- 1960~70년대 차관은 외자도입총액의 약 80%이상을 차지하며 외자도입을 주도
 - 특히 60년대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이던 무상원조를 대신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긴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9) 본 토픽은 舊 재무부와 한국산업은행이 공동발행한 「한국외자도입 30년사(1993)」의 내용을 전체 외자도입 중 일부인 '차관(공공·상업차관)'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된 1962년 이후 30년간의 차관도입 추이와 사례, 도입효과 등을 돌아봄으로써, 한국경제 성장기 차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됨.

< 기간별 외자도입 실적(총도입 기준) >

(단위: 백만불, %)

구분		1962~65	1966~72	1973~78	1979~85	1986~92	합 계
차 관	공공차관	63 (42.9)	1,130 (32.2)	3,431 (30.6)	10,105 (28.9)	4,688 (15.4)	19,417 (24.2)
	상업차관	71 (48.3)	1,950 (55.5)	5,858 (52.2)	7,937 (22.7)	5,206 (17.1)	21,022 (26.2)
	차관소계	134 (91.2)	3,080 (87.7)	9,289 (82.8)	18,042 (51.6)	9,894 (32.5)	40,439 (50.4)
외국인 투자		13 (8.8)	227 (6.5)	704 (6.2)	1,157 (3.3)	5,684 (18.7)	7,785 (9.7)
금융 부분	은행차관	- (-)	205 (5.8)	1,007 (9.0)	11,892 (34.1)	4,318 (14.2)	17,422 (21.7)
	금융기관 채 권	- (-)	- (-)	219 (2.0)	2,989 (8.6)	5,978 (19.7)	9,186 (11.5)
	금융소계	- (-)	205 (5.8)	1,226 (11.0)	14,881 (42.7)	10,296 (33.9)	26,608 (33.2)
기업채권		- (-)	- (-)	- (-)	834 (2.4)	4,515 (14.9)	5,349 (6.7)
합 계		147 (100.0)	3,512 (100.0)	11,219 (100.0)	34,914 (100.0)	30,389 (100.0)	80,1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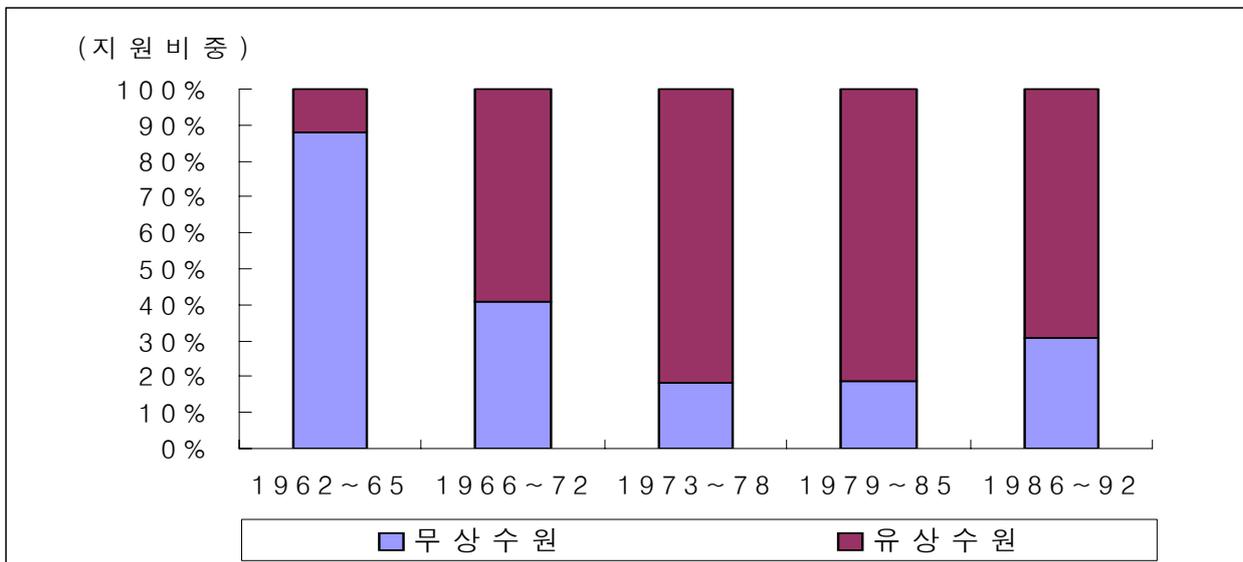


< 기간별 유·무상 ODA 수원 변화 추이 >

(단위: 백만불, %)

구분	1962~65	1966~72	1973~78	1979~85	1986~92	합계
무상수원	782 (87.8)	793 (40.8)	307 (18.4)	261 (18.7)	593 (30.8)	2,736 (35.0)
유상수원	109 (12.2)	1,152 (59.2)	1,360 (81.6)	1,134 (81.3)	1,331 (69.2)	5,086 (65.0)
합 계	891 (100.0)	1,945 (100.0)	1,667 (100.0)	1,395 (100.0)	1,924 (100.0)	7,822 (100.0)

자료 : OECD DAC 통계시스템



□ 70년대말 이후의 차관도입 추이

- 도입된 차관의 성공적인 운영과 상환의 결과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자도입방식이 다양화되고 외자도입조건이 개선되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짐
 - 70년대말 이후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 도입방식이 주를 이룸
 - 80년대 후반부터는 차관 총액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 동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외국인투자과 해외채권발행을 통한 기업들의 자체 외자조달규모가 급격히 증가
 -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교섭력 증가, 차관도입선 및 도입방식의 다양화는 70년대말 이후 외자도입조건의 개선에 크게 기여

II. 기간별 차관도입 환경과 주요 차관도입 사례

1. 1962 ~ 65 : 경제개발 추진과 외자도입체제 정비

가) 차관도입 환경

□ 개발자금수요 증가와 외자도입 체제 정비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으로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외자도입 관련 법적·제도적 체계가 마련됨
- 동 기간중, 차관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무상원조¹⁰⁾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
 - 다만, 우리나라의 낮은 대외신인도, 관련 경험과 기술부족, 국내자금 동원능력 부족 등에 기인하여 차관도입이 본격화되지는 못함

나) 차관도입 사례

□ 분야별 차관지원

- 공공차관
 - 외자도입총액의 42.9%인 63백만불 도입
 - 전력, 운수,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80.9%, 제조업에 12.7% 지원
- 상업차관
 - 외자도입총액의 48.3%인 71백만불 도입
 - 섬유, 시멘트, 비료 등 제조업에 67.6%, 원양어선 구입 등 수산업에 26.7% 지원

□ 공공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체신부	통신시설확장 1차	KFW ¹⁾	DM35	1962
	통신시설확장 2차	KFW	DM19	1965
철도청	객화차도입	IDA ²⁾	US\$17	1962
	디젤기관차 도입 I	AID ³⁾	US\$6	1962
	디젤기관차 도입 II	AID	US\$11	1965
한국전력	부산 화력발전소 건설	AID	US\$19	1962
	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AID	US\$13	1964

10) 한국전쟁 후 기초적인 경제재건을 위한 무상원조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50년대 중반 이후 원조방식의 전환(무상→유상)과 이국간 경제협력 증가 등으로 점차 감소 또는 종결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원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미국 원조는 195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 1)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 서독(現 독일) 경제부흥 기구로서 1958년부터 개도국 및 공공단체에 대한 자본지원 실시
 - 2)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저소득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양허적 조건의 금융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그룹 소속 국제개발협회
 - 3)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미국의 원조지원기관으로 現 USAID
- * '공공·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표' 상의 차관금액은 동 사업과 관련한 비교적 큰 금액의 협약액(또는 인가액)을 의미하며, 동 사업관련 수원 총액은 아님

□ 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한국비료	요소비료공장	일본	US\$42	1965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건설	미국	US\$20	1963
수산개발공사	원양어선도입	이태리 프랑스	US\$37	1963
쌍용양회	제 6시멘트 공장	서독	DM22	1963
한일시멘트	제 5시멘트 공장	서독	DM22	1963
흥한화학	비스코스 인건사	서독	DM20	1964

다) 차관도입 성과

□ 경제 자립기반 확립의 계기

-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과 함께 도입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한 차관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피원조국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대외 금융거래와 경제개발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계기로 작용
- 동 기간중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기초산업분야인 정유, 시멘트, 비료, 화학섬유 제조분야의 설비능력이 확충됨

2. 1966 ~ 72 : 성장기반 확충과 외자도입의 선별화

가) 차관도입 환경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에 따른 차관도입 본격 확대

- 공공차관 도입액은 총 1,130백만불로 외자도입총액의 32.2%에 달함
 - 장기·저리조건의 차관도입이 확대되었으며, 차관선 다변화 노력 및 대일청구권차관 도입 등의 영향으로 도입액이 꾸준히 증가
- 상업차관은 외자도입총액의 55.5%(1,950백만불)를 차지하며 외자도입을 주도
 - 투자수요대비 국내자본과 공공차관의 부족, 높은 국내외 금리차,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규모 일본차관 유입 등의 영향

- 한편 동 기간중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 이후부터는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유입이 시작됨

나) 차관도입 사례

□ 분야별 차관지원

- 공공차관
 - 기간중 도입총액의 45.3%(512백만불)가 농림수산업 관련 차관¹¹⁾이었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 43.6%(493백만불), 제조업에 10.2%(115백만불)이 도입됨
- 상업차관
 - 수출산업과 수입대체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관련 분야가 전체의 53.9%(1,051백만불)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분야가 42.1%(823백만불)로 그 다음을 차지

11) 원조식량 감소, 농산물 흉작 등에 따른 양곡도입용 대규모 차관 증가

□ 공공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농림수산부 외	미농산물 도입 일본식량청 미곡도입 현미도입	PL480차관 ¹⁾	US\$415	1968~71
		일본식량청	¥39,889	1970,71
		AID	US\$63	1971
체신부	통신시설확장사업 시외전화시설확장	KFW 대일청구권차관 ²⁾	DM59 ¥1,509	1969,71 1967,68,70
철도청	철도시설개량 1, 2차 디젤기관차 도입 제 3, 4차 철도차관 산업선 전철화 수도권 전철화 등 (서울 지하철 1호선)	OECE ³⁾	¥7,297	1966,67
		AID,US-EXIM ⁴⁾	US\$25	1966,68
		IDA,IBRD ⁵⁾	US\$98	1970,72
		유럽국연합차관	DM63 외	1962
		OECE	¥27,210 (¥11,802)	1972
서울시	상수도시설 확장	ADB ⁶⁾	US\$9	1972
한국전력공사	서울화전(당인리) 건설 영남화전1호기(울산) 송배전시설 확충사업	AID	US\$21	1966
		AID	US\$16	1967
		AID,ADB	US\$30	1967,70
		KFW	DM30	1971
포항제철	종합제철공장 건설	대일청구권차관	¥13,629	1971,72
한국도로공사	경부고속도로 건설	OECE	¥2,481	1968,69
농업진흥공사	금강·평택지구 개발 영산강 개발사업	IBRD	US\$45	1969
		IDA	US\$50	1972
산업기지 개발공사	안동댐 건설 소양강댐 건설	ADB	US\$17	1971
		대일청구권차관	¥7,795	1967,68,70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합리화자금 조성	AID	US\$12	1966
		ADB	US\$30	1970,72
		KFW	DM30	1966,70
		OECE,J-EXIM ⁷⁾	¥15,400	1972
장기신용은행	민간기업육성자금	IBRD	US\$55	1968,69 1971
	중소기업육성자금	IDA	US\$18	1968
한국의환은행	수출산업육성	J-EXIM	¥5,400	1971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및 기계공업육성	AID	US\$8	1966
		ADB	US\$25	1969,71
		OECE,대일청구권 차관,J-EXIM	¥16,200	1966,67 1971

- 1) PL480(Public Law 480)차관 : 미국이 자국의 농업수출과 대외 식량원조를 촉진코자 제정한 '공법 제480호'에 근거한 식량지원 차관
- 2) 대일청구권차관 :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공여받게 된 보상성 자금 중 차관 해당분(총 5억불 중 무상자금 3억불, 차관 2억불)
- 3) OECF(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 일본의 유상원조 제공기관으로, 1999년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합병(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하였다가 다시 분리되어 2008년 무상원조기구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통합
- 4) US-EXIM(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 미국 공적 수출입금융 제공기관
- 5)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중소득 개도국 앞 장기개발자금 공여를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그룹 소속 국제부흥개발은행
- 6) ADB(Asian Development Bank) :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협력증진, 지역 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회원국 앞 대출, 기술원조, 프로젝트 융자 업무 수행
- 7) J-EXIM(Export-Import Bank of Japan) : 일본 공적 수출입금융 제공기관으로 現 JFC(Japan Finance Corporation)

□ 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한국전력	여수화전	이탈리아,프랑스	US\$21,FFr28	1967
	인천화전 2호기	일본	US\$23	1967
	부산화전 3호기	서독	DM34	1967
	영남화전 2호기	서독	DM61	1968
	호남화전	프랑스	US\$5,FFr282	1968
	동해화전 2호기	서독,프랑스	DM51,FFr57	1968
	동해화전 3호기	서독,프랑스	DM43,FFr9	1969
	여수화전 2호기	영국	£ 11	1969
	원전(고리)1호기	미국,영국	US\$88, £ 27	1970
	포항제철	열연공장 건설	일본	US\$35
조선용 중후강판 설비		호주	AU\$534	1970
인천제철	선철공장 건설	서독	DM45	1967
대한석유공사	나프타분해공장건설	미국	US\$47	1967,71
경인에너지	발전설비 및 정유공장	미국,영국	US\$60	1969
쌍용양회	대단위시멘트공장	미국,일본	US\$38	1967
	시멘트공장 증설 및 공장건설	미국,파나마 영국,프랑스	US\$27,FFr75	1969
선경합섬	폴리에스텔	일본,미국	US\$16	1967
	폴리에스텔	일본	US\$14	1969
코오롱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텔 필라멘트	일본,미국	US\$17	1969
한일합섬	아크릴섬유 제조공장	일본	US\$20	1966
대한선박	신조화물선 도입	이탈리아,영국	US\$29	1967
범양상선	유조선 도입	미국	US\$30	1971

다) 차관도입 성과

□ 고도성장 기반 확충, 산업구조 개편 및 국제수지 개선

- 동 기간중 대규모 차관이 전력,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화학, 정유, 시멘트, 제철 등 기간산업 확충에 투자됨으로써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1차·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계기로 작용
- 또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과 맞물려 차관의 도입이 수입대체산업 및 수출 산업에 집중됨으로써 동 기간중 국제수지의 개선에 크게 기여

3. 1973 ~ 78 :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자도입의 가속화

가) 차관도입 환경

□ 제1차 석유파동¹²⁾ 및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에 따른 대규모 외자수요 발생

- 동 기간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투자재원의 조달과 제1차 석유파동에 기인한 경상수지 적자보전용 외자도입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임
- 동 기간중 공공차관은 법규의 정비와 차관도입선에 대한 교섭력 강화에 따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도입이 꾸준히 증가하였는 바, 외자도입총액의 30.6%에 이르는 3,431백만불이 도입됨
- 상업차관의 경우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른 대규모 자본소요 증가에 따라 외자도입총액의 52.2%에 달하는 5,858백만불이 도입되어 전기에 이어 최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금융기관에 의한 외자조달이 점차 활발해져 동 기간중 1,226백만불이 도입됨

12) 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아랍·이스라엘분쟁)이 석유의 정치적 무기화를 통한 석유전쟁으로 비화, 석유가격의 급등을 야기하였으며, 세계 경제는 제품생산 감소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경험

나) 차관도입 사례

□ 분야별 차관지원

○ 공공차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전기 43.6%에서 75.3%로 급상승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45.3%에서 20.3%로 하락

○ 상업차관

-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은 전기의 53.9%에서 69.0%로 상승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각각 전기의 42.1%와 3.9%에서 29.5%와 1.5%로 하락

□ 공공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정부 (非轉貸)	농업 및 농업용수개발 미농산물 도입 프로그램 1, 2차	OECF	¥32,600	1977,78
		미국정부	US\$97	1977
		IBRD	US\$175	1975,76
건설부 외	도로개량 및 도로건설 경주개발 광주권개발 북평항개발 낙동강연안개발 1차	IBRD,ADB	US\$366	1974~78
		사우디아라비아	SR123	
		IBRD	US\$25	1974
		IBRD	US\$15	1975
		OECF	¥11,177	1976
IBRD	US\$44	1977		
내무부 외	새마을 사업	IBRD	US\$157	1976,78
농림수산부 외	식량청 미곡차관 현미도입 미농산물도입	일본정부	¥7,670	1973
		AID	US\$24	1973
		미국정부	US\$266	1973,76
철도청	디젤기관도입 산업선 전철화 2, 3차	US-EXIM 외	US\$67	1975,78
		유럽국연합차관단	DM20	1974,75
			£ 20	
			FFr97	
			SFr6	
			BFr248	

도입처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철도차관 5, 6차 충북선 복선화	IBRD OECF	US\$220 ¥4,259	1975,78 1976
해운항만청	항만개발 1, 2차 부산·목호항 개발	IBRD SFD ¹⁾	US\$146 SR123	1973,77 1976
한국전력공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고리원자력 2호기 원자력 5, 6호기 건설	캐나다,영국 미국,영국 EXIM	C\$300 US\$33 £ 19 US\$381 £ 77 US\$850	1976 1977 1978
한국전기통신 공사(체신부)	1, 2차 M/W시설 통신시설 확장	EXIM KFW EDC ²⁾ OECF	US\$30 DM82 C\$21 ¥13,629	1976,78 1973~76
포항종합제철	종합제철공장 3, 4, 5차	대일청구권차관 J-EXIM	¥14,100	1973~75
농림진흥공사	2단계 영산강 개발 옥서지구농업개발 대단지 농업개발	IBRD IBRD OECF	US\$95 US\$36 ¥18,641	1977 1978 1974
산업기지 개발공사	대청 및 충주 다목적댐 건설 수계별 광역상수도	OECF ADB	¥23,153 US\$28	1974,78 1977
한국주택공사	AID 주택차관	AID	US\$90	1973~77
한국산업은행	민간기업육성차관 산업합리화 1, 2차 차관	IBRD,ADB OECF,대일청구권차관	US\$373 ¥15,400	1973~78 1974
장기신용은행	민간기업육성차관	IBRD,ADB	US\$333	1973~78
중소기업은행	민간기업육성차관	IBRD,ADB	US\$184	1973~78

1) SFD(Saudi Fund for Development) : 사우디아라비아 개도국 개발협력기구로 유상원조 담당

2) EDC(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 캐나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現 EDC(Export Development Canada)

□ 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한국전력	인천화력 3, 4호기 청평수력 1, 2호기 북합화력발전소 영동화력 1호기 아산화력 1, 2호기 북합화력 및 부평가스터빈	프랑스 일본,파나마 미국 일본 일본 미국	FFr432,US\$10 ¥12,236,US\$9 US\$131 ¥15,861 ¥20,926 US\$61	1974 1976 1976 1976 1977 1976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울산화력 4, 5, 6호기 원전 5, 6호기	스위스,서독 홍콩	DM142,SFr395 US\$400	1977 1978
포항제철	제 2, 3, 4기 설비확장공사, 기존설비의 개보수, 현금차관 등	일본,프랑스 서독,홍콩 오스트리아 호주,벨기에 인도,미국	US\$269 ¥219,129 SFr32,DM275 FFr561 BFr1,330 A\$4,352, £22	1973~78
대한항공	항공기도입(보잉 747도입 등)	미국,캐나다 홍콩	US\$327	1973~78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건설 및 기자재 도입	영국,스웨덴 덴마크,핀란드	US\$30,Skr3	1978
대한해운공사	폴컨테이너선 도입	프랑스,미국,홍콩, 리베리아,바하마	US\$54,FFr22	1974~78
현대자동차	종합자동차 공장 건설	프랑스,영국,일본 호주,바하마	US\$5,FFr56 ¥1,160, £20 A\$6	1974,75
온산제련소	대단위 동제련소 건설	벨기에,영국 핀란드	BFr1,185, £13 US\$45	1974,75
쌍용양회	제 1, 2단계 시멘트공장증설	서독,프랑스,영국 홍콩,남아공 스위스,덴마크 룩셈부르크 홍콩	FFr261,DM24 £4, BFr346 RD5, SFr100 DFi8,US\$63	1976~78
호남에틸렌	나프타분해공장 유틸리티 도입 등	영국,일본,홍콩 싱가폴	US\$37, £13 ¥25,537	1976,78
한양화학	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3개 석유화학계열 공장 건설	영국	£34,US\$24	1976
한국다우케미칼	전해공장 건설	영국	£34,US\$37	1976
충남방적	염색가공공장건설 및 섬유원료 도입	미국,영국,홍콩	US\$107	1976~77
한일합섬	합섬생산설비 및 섬유원료 도입	미국,영국,독일 홍콩,벨기에	US\$90,DM36 SFr7	1973~77
선경	폴리에스터SF사 공장건설	영국,프랑스	US\$31	1976
동양펄프	대단위 화학펄프공장 건설	서독,핀란드	US\$33,DM24	1977

다) 차관도입 성과

□ 대규모 투자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투자재원 부족 해소

- 동 기간중 중화학공업 육성,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가하여 국내투자가 국내저축을 크게 상회하였는 바, 동 기간중 조달된 중장기 대규모 차관자금은 부족한 국내 투자재원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함

□ 산업구조 고도화 기여

- 동 기간중 외자도입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 차관은 건설, 전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부문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에 중점 투입됨으로써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
 - 동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1%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연평균 1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전기('66~'72)의 21.4%에서 30.8%로 증가, 공업부문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도 '78년에 약 50%로 증가
 - 수출도 연평균 31.6%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이중 기계, 화학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부문이 42.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4. 1979 ~ 85 : 경제의 안정기반 조성파 외자도입 다양화

가) 차관도입 환경

□ 외자도입조건 개선 노력 진행

- 제2차 석유파동¹³⁾의 발생, 유가상승 및 교역조건 악화에 기인한 무역수지 적자규모의 확대 등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외자도입시 보다 나은 도입조건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

13) 1978년 12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가격 인상결과 이란의 석유생산 감축 및 수출중단에 기인하여 1차 석유파동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원유가격이 급격히 상승,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함

□ 외자도입방식 다양화와 차관비중 감소

○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도입 강화

- 동 기간중 국내 금융시장의 성장과 국제적인 금융증권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도입이 외자도입총액의 42.6%(14,881백만불)를 차지함으로써 상업차관을 대신하여 외자도입을 주도

○ 상업차관 비중 감소

- 반면 60~70년대 외자도입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외자도입을 주도하였던 상업차관은 국제고금리현상과 투자수요의 부진 등으로 기업들이 신규도입을 기피함에 따라 그 비중이 22.7%(7,937백만불)로 축소

○ 공공차관은 외자도입총액의 28.9%에 달하는 10,105백만불이 도입되어 주요 외자조달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

○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대외신인도 향상에 힘입어 1984년이후 기업들이 해외채권발행을 통해 자체적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투자를 통한 자금유입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함

나) 차관도입 사례

□ 분야별 차관지원

○ 공공차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전기 75.3%에서 85.0%로 상승한 반면 농림수산업은 20.3%에서 8.8%로 하락

○ 상업차관

- 제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전기의 69.0%에서 44.8%로 감소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전기의 29.5%에서 54.4%로 크게 상승

□ 공공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	제 1, 2차 경제구조조정기금	IBRD	US\$550	1981,83
내무부	지방도 건설사업 및 도로부문	IBRD	US\$355	1982,84
건설부	광주권 2단계 개발 지방 상수도 사업 전주권 개발 주암다목적댐 건설 수도권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IBRD IBRD IBRD OECF IBRD	US\$65 US\$90 US\$60 US\$100 ¥11,000	1979 1981 1984 1984 1985
건설부 외	지방도시 상하수도 확장사업	ADB	US\$257	1979,81 1983,84 1985
해운항만청	감천항 개발	SFD	SR174,000	1984
철도청	경부선 CTC사업 석탄·양회 수송체계개선	IBRD IBRD	US\$67 US\$122	1985 1983
서울시	탄천 하수처리장 건설	OECF	¥11,500	1983
부산시 외	하수처리장 건설	OECF	¥20,100	1985
한국전력공사	삼천포화력 1, 2호기 건설 월성 1호기 추가차관 고정화력 1, 2호기 삼랑진 양수발전소 건설 원자력 7, 8호기 건설 원자력 9, 10호기 1, 2차 계통	US-EXIM 캐나다 US-EXIM ADB US-EXIM US-EXIM BFCE ¹⁾	US\$79 US\$200 US\$175 US\$53 US\$1,101 US\$1,621	1979 1979 1979,80 1980 1980 1980,81 1982
한국전기통신 공사	제 3차 M/W 시설 제 1, 2차 통신 PCM 통신망 시설 확충 전자교환시설 및 추가차관 중용량 전자교환시설 및 착수금 농어촌 전자교환 시설	US-EXIM US-EXIM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스웨덴	US\$30 US\$653 US\$57 US\$376 US\$120 US\$103	1980 1980,81 1980 1980,81 1982 1983
산업기지개발 공사	충주 다목적댐 건설 낙동강 하구사업	IBRD IBRD	US\$125 US\$79	1979 1983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합천 다목적댐 건설	OECD	¥20,400	1983
한국산업은행	산업금융부문 1, 2차	IBRD	US\$477	1983,85
장기신용은행	제 4, 5차 민간기업차관 민간기업육성차관	ADB IBRD	US\$130 US\$90	1981,83 1981
중소기업은행	제 3, 4차 중소기업육성	IBRD ADB	US\$120 US\$90	1979,81 1980,82
국민은행	제 1, 2, 3차 소규모기업 육성 제 1, 2차 소규모 기업 육성	ADB IBRD	US\$80 US\$60	1979,81,84 1980,82

1) BECF(Banque Francaise du Commerce Exterieur) : 프랑스 국영 수출입금융 지원은행으로 96년 민영화

□ 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약정기준)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부산시	지하철 1호선 건설	일본	US\$226	1981,83
서울시	지하철 3, 4호선 건설	영국,미국	US\$482	1980,82
포항제철	제 5코스공장 건설 제 4기 신규선재공장 광양제철 제 1소결공장 " 제 1코크스 공장 " 제 1제강 공장 " 제 1연주 공장 " 제 1열연 공장 " 제 1제선 공장 " 제 2코크스 공장 " 제 2제선 제 2냉연공장 연속소둔설비	서독,일본 서독,일본 호주 서독 오스트리아 서독,일본 일본 영국 일본 영국 서독	US\$42 US\$42 US\$31 US\$52 US\$49 US\$54 US\$154 US\$48 US\$45 US\$44 US\$50	1981 1982 1983 1984 1984 1984 1984 1984 1984 1985 1985 1985
한국전력공사	아산화력발전소 5, 6기 서해화력 1, 2호기 건설 전원개발 및 소요자금조달 고정화력 1, 2호기 건설 원전 7, 8호기 건설 전력생산 및 판매 원자력 2호기 건설	일본 영국 영국 일본 미국 홍콩 영국	US\$73 US\$85 US\$100 US\$83 US\$200 US\$310 US\$123	1979 1979 1979 1980 1981 1982 1982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국	차관금액	연도
	전원개발을 위한 내자지원 원전 9, 10호기 건설	일본	US\$40	1983
	원전 5~10호기, 고정 1, 2기	홍콩	US\$35	1984
	삼랑진 양수발전 등의 현금차관 전원개발시설재 및 핵연료도입	홍콩	US\$70	1984
	1985년도 전력사업자금 조달	일본	US\$40	1985
		일본	US\$105	1985
한국방송공사	방송망시설도입	영국	US\$37	1981
석유개발공사	시추용 선박 건조	홍콩	US\$38	1983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건설기자재 도입	영국	US\$30	1980
호남정유	정유공장 증설	미국	US\$200	1980
극동정유	중유 정제분해설비시설	영국	US\$202	1985
기아산업	차량설비 및 생산설비 개체	프랑스	US\$50	1984
대우자동차	전륜구동형 소형승용차 개발	일본, 홍콩	US\$80	1985
현대자동차	전륜구동형 소형자동차 생산	영국, 일본, 홍콩	US\$142	1982, 83, 84
현대전자	반도체 생산설비 증설	미국, 홍콩	US\$80	1985
금성반도체	전자교환기 및 반도체 제조시설	미국	US\$61	1981
삼성반도체통신	반도체 생산공장 설비증설	영국, 일본	US\$171	1984, 85
삼성코닝	컬러 TV브라운관 제조	미국	US\$43	1981
한국수출입은행	연불수출기자재 전대차관	일본, 노르웨이	US\$72	1981, 82
외환은행	전대차관	스위스	US\$31	1980, 81

다) 차관도입 성과

□ 사회간접자본 확충, 전략산업 육성 및 산업 부문간 불균형 해소

- 동 기간중 도입된 차관은 원자력발전소, 통신설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전기, 전자, 운수장비 등 신성장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은 물론 산업합리화, 중소기업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그 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부문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

5. 1986 ~ 92 : 경제체질 개선과 외자도입 적정화

가) 차관도입 환경

□ 외자도입액 감소와 외자도입 적정화 진전

- 경상수지의 흑자전환을 배경으로 신규 외자도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한편 불리한 조건의 외자에 대한 조기상환이 추진됨으로써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던 외자도입총액이 감소하고 외자도입방식의 다양화가 크게 진전됨.
 - 동 기간중 금융기관을 통한 외자도입이 외자도입총액의 33.9%를 차지함으로써 최대 비중을 유지하였고, 외국인투자 및 기업의 해외채권발행을 통한 외자도입이 18.7%(전기 3.3%)와 14.9%(전기 2.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짐
- 한편, 전기에 크게 증가하였던 공공차관의 도입은 4,688백만불에 그쳐 그 비중이 15.4%(전기 28.9%)로 낮아졌으며, 상업차관의 도입도 17.1%(전기 22.7%)를 기록, 감소세가 지속됨

나) 차관도입 사례

□ 분야별 차관지원

- 공공차관
 - 도로, 상하수도,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 전체의 87.6%가 지원
- 상업차관
 - 정부의 차관대상사업 한정 등의 영향으로 기계, 전자, 자동차, 금속 등 제조업 지원비중이 전기의 44.8%에서 66.9%로 증가
 -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비중은 전기 54.4%에서 33.1%로 하락하였는 바, 이는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국내재원조달 증가와 사업수행기관의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른 자체 자금조달(해외채권 발행 등) 증가 등에 기인

□ 공공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건설부	국민주택건설 및 주택기금 지원 도로부문 2차 차관 도로부문사업 임하다목적댐 건설사업 제 10차 상수도사업 주암댐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	IBRD	US\$250	1987,1991
		IBRD	US\$200	1989
		ADB	US\$100	1988
		OECF	¥6,975	1987
		ADB	US\$10	1989
		IBRD	US\$34	1989
교육부	교육시설확충사업(II) 교육실습선 건조사업 기초과학 및 첨단과학지원 사업 수·해운계 교육시설 확충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 재 도입	OECF	¥18,831	1987,88
		ADB	US\$53	1987
		IBRD	US\$95	1990,92
		OECF	¥2,160	1990
		IBRD	US\$60	1991,92
보건사회부	병원의료시설 및 보건연구장비 현대화	IBRD	US\$90	1991,92
해운항만청	부산항 3단계 사업	IBRD	US\$141	1986
서울시	서울지하철 건설사업	OECF	¥72,000	1990
부산시 외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건설 등	ADB	US\$78	1986,88,90
		OECF	¥10,965	1987,88
		IBRD	US\$40	1992
대구시	대구고속화도로	IBRD	US\$30	1988
한국전력	송배전 시설사업	IBRD	US\$230	1986
농어촌개발공사	영산강지구 종합개발사업	OECF	¥4,440	1988
한국도로공사	경기도지역교통 제5차 도로개량 사업	IBRD	US\$116	1988
		ADB	US\$100	1989
한국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IBRD	US\$100	1991
서울대학교	의료장비확충사업	OECF	¥4,320	1990
이화여대 외	사립대학병원시설확충사업	OECF	¥5,624	1988
축협	낙농시설개선사업 등	OECF	¥11,737	1987,90
기업은행 외	중소기업금융차관	OECF	¥25,470	1987,89
농협	농업기계화지원차관사업 유가공공장 건설사업	OECF	¥25,470	1987
		OECF	¥25,470	1987

□ 상업차관 주요 추진사업

(통화단위: 백만)

도입자	추진사업	공여자	차관금액	연도
한국전력	원전 9, 10호기	영국	US\$100	1986
	원전 11, 12호기	미국	US\$100	1987
	영광 3, 4호기, 울진 3, 4호기 등	아일랜드	US\$150	1992
포항제철	광양제철 냉연연속 도금설비	프랑스	US\$35	1987
	제2선재보완 및 제3선재 설비	일본	US\$60	1987
	광양제철 냉연산세 및 냉간압연	일본	US\$63	1987
	광양제철 냉연연속 소둔설비	홍콩	US\$62	1987
	광양제철 제3기 건설 및 합리화	홍콩	US\$270	1988
현대자동차	자동차설비 증설	일본	US\$30	1986
기아산업	수출전략형 소형승용차 생산설비	싱가폴	US\$40	1986
삼성코닝	칼라TV 브라운관용 유리생산설비	영국	US\$40	1986
삼성석유화학	고순도 TPA 생산설비 증설	영국	US\$30	1986
호남에틸렌	나프타 분해시설 증설	일본	US\$87	1986

다) 차관도입 성과

□ 외자도입구조 다양화를 통한 차관의 역할 이전

- 동 기간중 도입된 차관은 여전히 ‘사회간접자본’ 형성과 ‘공공서비스 부문’ 개선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되었으나, 이전 기간까지 항상 외자도입 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던 차관은 그 비중이 32.5%로 축소되어 역할이 점차 감소함
- 한편, 차관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 차관사업의 성공적 운영과 자금의 원활한 상환의 결과 우리 경제는 안정된 성장기반과 높은 대외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해외채권발행, 외국인의 국내투자, 금융기관의 해외조달 등 외자도입구조의 다양화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민간주도의 자립경제능력을 배양시키는게 크게 기여함

Ⅲ. 한국경제 성장기 차관의 역할과 시사점

□ 투자재원 보완

- 대규모로 도입되는 차관은 경제성장기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국내투자와 국내저축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低저축→低투자→低생산→低소득」으로 이어지는 빈곤의 순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자금의 수원을 통해 동 불일치가 보완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62년 이후 30년간 차관도입총액(40,439백만불) 대비 ODA 무상수원금액(2,736백만불)의 비율은 6.77% 수준으로 미미하였던 바, 경제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에 있어 무상지원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도입의 견인차

- 차관의 도입, 도입된 차관의 원활한 운용 및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은 결과적으로 해당국가의 대외신인도와 투자매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함

- 특히 개발원조차관(전체 차관중 ODA로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무상지원자금이 감소추세를 보였던 6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외자도입이 이루어지는 70년대 초반까지 대규모 투자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 외자도입 초기인 1962~65년의 기간중 개발원조차관액은 전체 외자도입액(147백만불)의 74.2%(109백만불)에 달하였으며, 1966~72년의 기간동안에도 전체 외자도입액(3,512백만불)의 32.8%(1,152백만불) 수준을 유지

·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과 대외신인도 향상에 따라 동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비례하여 ODA로 계상되지 않는 상업적 대출금의 조달과 외국인투자, 금융기관 해외차입 및 채권발행, 민간기업 해외채권발행 등을 통한 외자의 조달은 크게 증가하였음

□ 경제 자립성 배양

- **상환의무를 전제로 하는 차관의 특성**은 지원사업의 선정으로부터, 사업의 운용, 자금의 최종 상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도입국 스스로의 노력과 책임하에 수행토록 함으로써, **도입국에게 경제 자립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
 - 체계적인 차관도입계획의 수립과 성공적인 차관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는 후발 개도국들에게 유상차관을 활용한 경제개발의 성공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도입국의 경제자립능력의 배양과 관련한 차관의 역할은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책임감 제고, 수원국의 개발계획과 원조계획의 일치 등 최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목표 과제들¹⁴⁾과 관련하여 유상 형태의 차관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반증함

자 료 : 한국외자도입 30년사(재무부, 한국산업은행 공저, 1993)

작 성 : 김 평 석, kps1591@koreaexim.go.kr

목차보기

14) 파리선언 5대 과제: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Accountability

ODA 단신 1

OECD DAC의 원조효과성에 관한 제3차 고위급포럼 (Accra High Level Forum) 주요 내용

1. 회의 개요

□ 개최배경

- OECD DAC에서는 그 동안 2차례* 개최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HLF, High Level Forum)에서 선언된 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동강령을 채택코자 '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제3차 HLF를 개최

* '03. 2월 제1차 HLF(이태리 로마) 및 '05. 2월 제2차 HLF(프랑스 파리)

- 130개국 각료급 대표 80여명 및 공여국, 수원국,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720여명이 참여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이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

2. 고위급포럼 주요 내용

□ 주요 토론 의제

- 파리선언에 대한 평가 및 주제별 Roundtable 개최
 - 지금까지의 파리선언 이행 성과 평가¹⁵⁾
 - 파리선언의 5대 중점 추진과제(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Accountability) 및 4개의 추가 주제에 대한 집중 토의(Roundtable) 개최

15) 2008 국제 ODA 동향 제2호, "DAC 제12차 원조효과작업반(WP-EFF) 회의 주요 내용" 참고.

- **아크라 고위급포럼의 행동강령(AAA, Accra Agenda for Action) 최종 채택**
 - 130여개 참가국의 각료급 대표가 Roundtable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크라 고위급포럼의 행동강령 최종 채택

□ Round Table의 주요 토의 내용

- **수원국의 주인의식(Roundtable 1: Country Ownership)**
 - 전통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주인의식 실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방정부, NGO, 의회 등을 모두 포함하는 참여적 주인의식(Participatory Ownership)**을 강조
 -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 **원조정책의 일관성(Roundtable 2: Alignment/Use of Country Systems, Untying, Predictability)**
 - 원조정책의 일관성 기술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수원국의 국가개발 전략과 공여국의 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개발 및 개발우선순위의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수원국 개발전략이 공여국의 시민사회·국회 등의 정치적 요구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원조정책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여국 내에서 원조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을 지적
- **원조 조화(Roundtable 3: Harmonization/Rationalization of Aid Delivery, Complementarity, Division of Labor)**
 - 실질적으로 원조분업을 실시하기 전에 공여국, 수원국 양측 모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최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신흥공여국, 글로벌 펀드** 등이 이 같은 원조분업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또한, 파리선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경, 인권, 양성평등 등 다각적 이슈(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
 - 각 공여국간 상이한 법률체계 및 원조지원 조건(Conditionality), 리더십 부재 등이 파리선언 이후 원조분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됨

- 성과중심의 관리(Roundtable 4: Development Results and Impacts)
 - 성과중심관리는 기존의 '투입 - 산출'의 개념을 뛰어넘어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성과중심관리의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의 설정**,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
 - 성과중심관리의 장애요인으로는 **공감대 부족, 수원국 시스템 활용 저조,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 중심의 평가체계, 수원국 통계자료의 불확실성** 및 **수원국 및 공여국의 인센티브 부족** 등을 지적
 - 성과중심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관련 역량 개발과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공여국에서도 수원국의 노력을 지지하려는 실질적인 조치를 펴야 함을 강조
- 공동책무성(Roundtable 5: Mutual Accountability)
 - 공동책무성은 수원국과 공여국 정부에만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개념으로 이의 강화를 위해서는 **원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형 사업진행**이 필요함을 강조
- 시민사회의 역할(Roundtable 6: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dvancing Aid Effectiveness)
 - 시민사회가 원조효과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공유함으로써 개발에 있어서 시민사회 역할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
 - 동 Roundtable에 참여한 시민사회 대표들은 향후 개발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호소
- 취약·분쟁상황에서의 원조효과성(Roundtable 7: Fragility and Conflict Situations)
 - 파리선언의 일반 원칙의 적용이 쉽지 않은 취약국 및 분쟁국에서는 우선적으로 분쟁 종식, 평화체계 수립 및 국가기본시설의 재건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취약국·분쟁국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의 복구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을 촉구

- **분야별 접근을 통한 원조효과성 강화**(Roundtable 8: Sectoral Application of the Parist Declaration - Health,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Others)
 - 분야별 접근(Sector Wide Approaches) 방식의 원조는 프로그램 원조방식으로서 수원국 및 공여국의 원조사업 비용을 줄이고 공여국간 자연스러운 공동 작업을 유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원조효과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원조체계의 변화**(Roundtable 9: Implications of the New Aid Architecture on Aid Effectiveness and the Role of Non-DAC Donors)
 - 전통적인 OECD DAC 회원국의 원조규모 확대와 더불어 최근에는 한국, 중국 등의 신흥 원조공여국, 게이트 재단과 같은 글로벌 펀드 등의 원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협력 강화를 통해 원조 분산(Aid Fragmentation)으로 인한 원조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또한 전통적 북남 형태의 원조체제를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의 다양한 방식의 원조체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
- * 삼각협력(Trilateral Cooperation): 공여국이 개도국을 통해 타개도국을 지원하는 방식

3. 시사점

- 우리나라는 '05. 3월 파리선언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한 국가로서 금번 회의에서 주요 Non-DAC 회원국으로서 주목 받음
- 과거 주요 원조 수원국에서 Non-DAC 공여국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 우리나라 정부의 2010년 DAC 가입 예정 등 향후 우리나라 ODA에 대한 국제 원조사회의 관심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의 역량에 맞는 보다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실천해 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격(國格)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작 성 : 엄 성 용, syum@koreaexim.go.kr

(붙임) 아크라 고위급포럼의 행동강령(AAA)의 주요 내용

(붙임)

아크라 고위급포럼의 행동강령(AAA)의 주요 내용

- AAA는 ①도입부, ②주인의식 강화, ③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④개발성과 강조 및 책임강화, ⑤향후 계획의 5개 부분으로 구성
 - ① 도입부: 2005년 파리선언 이후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의 달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AAA 채택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설명
 - ② 주인의식 강화: 수원국의 시스템을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이의 활용성을 높이며, 공여국이 수원국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선언. 또한, 총 원조 지원액의 66%를 프로그램 방식의 원조(PBAs: Program Based Approachs)로 지원하고 이국간 원조의 50%까지를 수원국의 재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할 것을 선언
 - ③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2009년 6월까지 전세계적 원조 분업 체계에 대해 분석할 것. OECD DAC 회원국들은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해 최빈국 뿐만 아니라 고채무빈국(HIPCs)에 대해서도 모든 원조를 Untied 방식으로 제공하며, 신흥 원조공여국 및 글로벌 펀드 등의 새로운 지원자와 협력할 것. 원조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 북남협력에서 나아가 남남협력, 삼각협력 등의 방식을 추가할 것임을 선언
 - ④ 개발성과 강조 및 책임 강화: 수원국과 공여국은 공동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것을 선언. 개발성과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도록 노력하며, 2010년까지 각 국별 개발성과에 대한 점점을 실시할 것이며, 원조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공여국이 3-5년의 중장기 원조지원계획을 밝힐 것을 결의
 - ⑤ 향후 계획: AAA의 이행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필요한 만큼 각 수원국 및 공여국 정치지도자들의 지원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파리선언의 목표시점인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목차보기

ODA 단신 2

2008 KOAFEC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요

□ 개최 배경

- KOAFEC(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은 '06년 기획재정부 · 한국수출입은행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공동 출범한 **韓·아프리카 경제협력 협의체**로,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함
- “한국과 아프리카간 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 제고(Fostering Synergies between Korea and Africa)”를 의제로, '08년 제2차 회의 개최(10.27~30)
 - 아프리카 대표단 130여명(장관급 24명, AfDB 총재,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의장 등) 참석

< KOAFEC 주요 진행경과 >

- '06. 4월: 「KOAFEC 제1차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개최 (아프리카 14개국 장·차관급 인사 참석)
- '06. 5월: 참가국들은 한국과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경제협력체 구성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 '06. 12월: 동 공동성명서를 바탕으로 KOAFEC 자문단 조직 출범
- '07. 5월: 동 자문단은 「'07/'08년 Action Plan」을 발표하여 8억불 규모의 16개 협력사업 추진(진행중)
- '07. 10월 ~ '08년 7월 : 튀니지, 남아공, 탄자니아, 가나 등에서 한국 경제개발경협 개관, ODA 및 FDI 활용,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개발 등을 주제로 아프리카 47개국 대상 권역별 워크샵 개최

□ 회의 주요 내용

- 『2008 KOAFEC Seoul Initiative』 최종 확정
 - ※ KOAFEC Seoul Initiative : 6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해 참가 장관 공동명의로 경협확대 방향 제시(<붙임> 참고)
- 『KOAFEC Action Plan 2009/10』 합의
 - 6대 중점협력분야별로 총 16개국 대상, 29개 사업, 757백만불 지원 합의
 - 인프라/자원개발 : 앙골라 항만건설사업 등 총 10개(431백만불) 사업
 - IT 협력 : 탄자니아 ICT 정부행정망 구축사업 등 총 2개(118백만불) 사업
 - 인력개발 : 카메룬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 등 총 7개(154백만불) 사업
 - 개발경험공유 : 권역별 농촌개발협력 현지워크샵 등 총 3개(2백만불) 사업
 - 농업발전 : 에티오피아 비료지원사업 등 총 4개(51백만불) 사업
 - 녹색성장 : 세네갈 태양광 발전 연구사업 등 총 3개(1.5백만불) 사업
- 기타 EDCF 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

□ 시사점

- 『韓·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 회의』 는 아프리카의 에너지, IT, 교육 분야 등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금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과 더불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등 아프리카 경제협력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 아프리카 경제협력에 범정부적 채널을 구축

작 성 : 정 재 현, jhjung@koreaexim.go.kr

(붙임) 2008 KOAFEC Seoul Initiative 주요 내용

(붙임)

2008 KOAFEC Seoul Initiative 주요 내용

- ① (인프라 및 자원개발) 아프리카 에너지 부문의 급격한 발전 및 자원 개발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고려, KOAFEC을 통한 에너지 부문 개발 및 기술 협력 확대
- ② (IT 협력) 아프리카의 IT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IT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 해소 등에 한국의 첨단 IT 기술지원 지속
- ③ (인력개발) 현재 아프리카의 열악한 교육 수준과 부족한 교육 시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바, KOAFEC은 직업훈련, 교육시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차세대 아프리카 지도자 육성사업(Next African Leader Program)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 ④ (개발경험공유) 한국의 개발 경험이 아프리카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개발경험 공유 프로그램 확대
- ⑤ (농업발전) 아프리카 농업의 인프라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특히, '새마을 운동' 등 농업 진흥 프로그램 도입
- ⑥ (녹색성장)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친화적 경제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바, 양 지역간 신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목표로 녹색성장 분야 협력 및 지원을 확대

목차보기

ODA 단신 3

JBIC, '쿨 어스 파트너십'에 따른 첫 번째 기후변화대책 엔차관 공여

- JBIC은 9월 2일, 인도네시아 앞 307억 6,800만엔 한도의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 차관' 공여계약 체결
 - 본 차관은 금년 1월, 일본정부가 발표한 '쿨 어스 파트너십'¹⁶⁾에 근거하는 첫 번째 기후변화대책 엔차관¹⁷⁾임
 - 차관 금액 및 조건

차관명	금액 (백만엔)	금리(년)	상환기간/ 거치기간	조달 조건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론	30,768	0.15%	15년/5년	일반언타이드 (Untied)

-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론' 공여 배경 : 인도네시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 인도네시아는 유엔기후변화협약 COP13의 의장으로서 2013년 이후 '포스트-교토' 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은 물론, 자국의 포괄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반감추진이라는 일본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산림의 벌채 등 산림에서의 이산화탄소배출을 고려할 경우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탄소배출국이며, 산림배출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도 ASEAN에서 1위 배출국으로 향후 경제성장을 고려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가 시급

16) 일본 후쿠다 총리가 2008. 1. 26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100억불 규모의 개도국 온실가스 배출삭감 지원책으로, 향후 5년간 5,000억엔 규모의 기후변화대책 엔차관을 공급할 예정

17) 본 차관은 온실가스 배출억제에 대해 정책협의를 거친 국가에 대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기여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 공여되며, 지원조건은 일반 엔차관 대비 양허적임

-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 차관'의 내용: 정책·제도 지원형 프로그램 차관
- 본 차관은 양국이 합의한 아래 3개 분야에서의 '정책 액션'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
 - ①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산림보전,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
 - ② 기후변화 적응(통합적 유역 관리 능력 향상, 상하수도 개선, 관개관리, 영농지도 체제의 강화)
 - ③ 공동 과제(기후변화대책 실시와 관련된 조정체제의 정비, 국가개발계획에서의 기후변동대책 우선, CDM 사업 형성 촉진, 기상관측체제 강화 등)
 - '정책 액션' 달성상황의 평가를 위해서 JICA의 전문가가 파견될 예정
 - 프로그램 차관은 재정지원(budget support)의 형태로 실시되며, 차관자금은 일반 물자의 수입에 필요한 결제자금에 충당될 예정

붙임 : '쿨 어스 파트너십' 개요도

작성 : 박희갑, hkpark@koreaexim.go.kr

정리 : 안미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클러스터 파트너십’의 개요도

2008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공급

→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경제성장을 병행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

약 2,500억엔

환경피해 대책지원
클린에너지 사용지원

무상자금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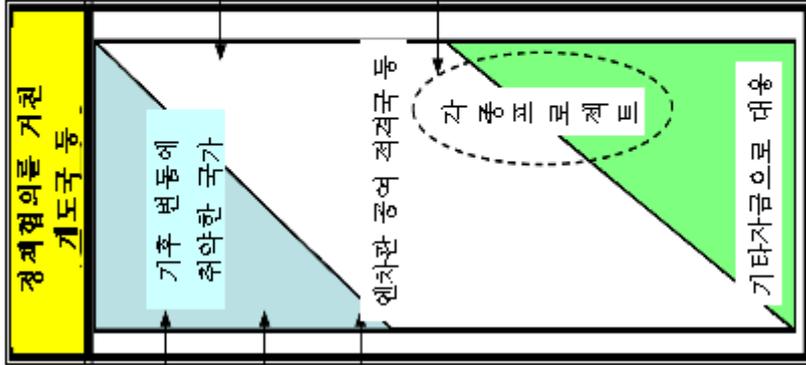
기술협력

출연

국제기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책 및 클린 에너지
사용을 지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

(예)
삼림 보전, 방재, 한발·홍수 등의 기후 변화 관련
환경 피해 대책 지원
태양광이나 소규모 수력 등에 의한 농촌 전력 공급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촉진

(예)
발전 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상

민간기업
각종펀드 등

민간자금의 참여로
기술이전 촉진

기후변동 완화지원

기후변화대책
프로그램 차관
=5,000억엔

기타 공적자금

JBIC

일본무역보험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NEDO 등)

(*) 아울러, 미국·영국과 함께 새로운 다자간 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 공여국에도 참가를 요청함

ODA 자료 1

2007년도 우리나라 ODA통계(확정치)의 주요 내용

1.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 2007년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전년대비 53.6% 증가한 6억 9,906만 달러로, 2007년 국민총소득(GNI)의 0.07%를 기록
- '07년 중 다자간 원조의 대폭증가가 주 요인
 - 다자간 원조 증가규모 : 전년대비 159.6%, 1억 2,640만 달러 증가
 - ※ IDA(국제개발협회)에 대한 출자·출연 규모 : '06년(없음) → '07년(8,233만 달러)
- 양자간 원조도 전년대비 31.2% 증가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39.5% 증가, 유상원조는 전년대비 1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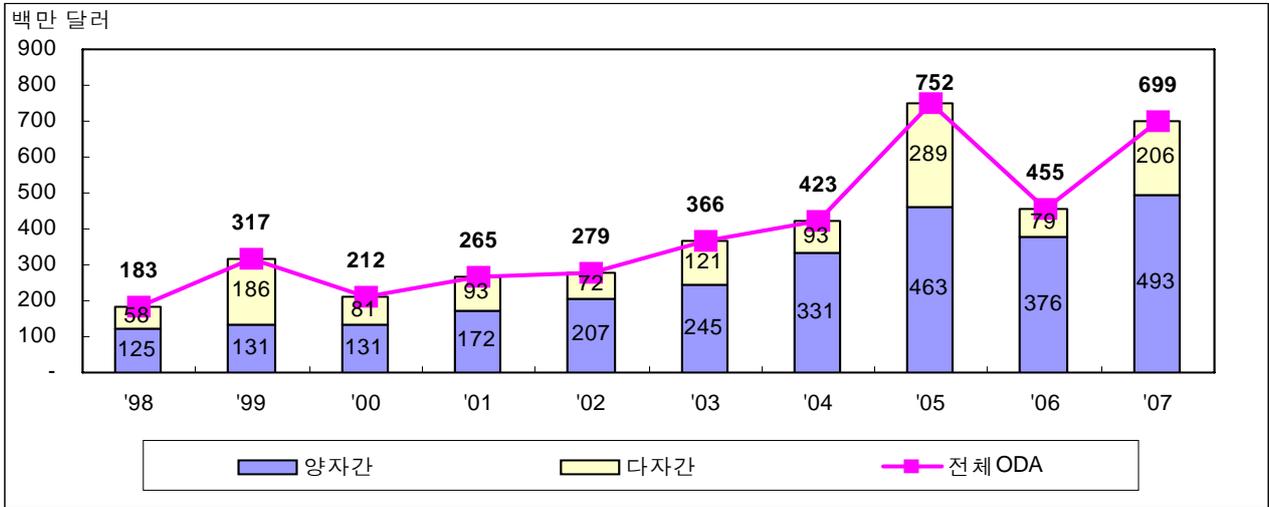
2007년도 우리나라 ODA 확정통계 현황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성 항 목	2006년	2007년	증감율(%)	비중(%)
ODA ^{주)} (A+B)	455.25	699.06	53.6	100
양자간 ODA (A)	376.06	493.47	31.2	70.6
무상원조	258.95	361.28	39.5	양자중: 73.2
유상원조	117.11	132.19	12.9	양자중: 26.8
다자간 ODA (B)	79.19	205.59	159.6	29.4
ODA/GNI (%)	0.051	0.07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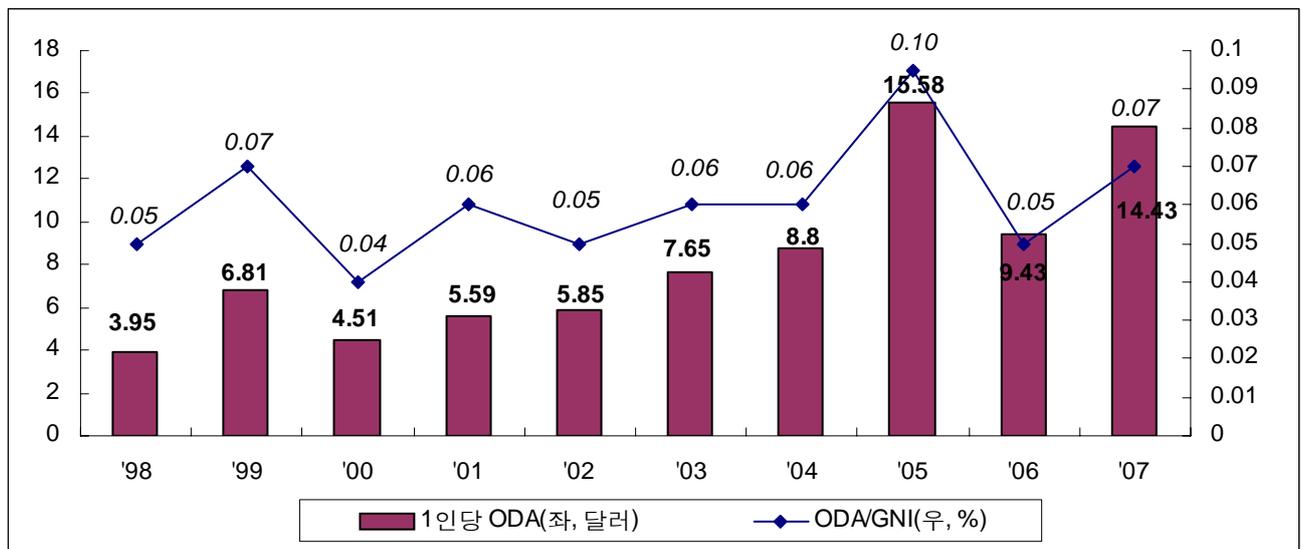
주) 대북관련지원은 2008년부터 OECD 앞 ODA 통계 보고서 참고항목(Memo Item)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07년 대북관련 지원 중 ODA 적격인 지원규모는 5억 5,816만 달러 수준임

우리나라 ODA의 연도별 추이 (순지출 기준)



- (양자간 : 다자간) 지원비중은 (71% : 29%)로 전년에 비해 다자간 원조 비중이 12% 포인트 상승
- 2007년도 「ODA/GNI 비율」은 0.07%, 「1인당 ODA」는 14.4달러를 기록
 - ODA/GNI 비율: '06년(0.05%) → '07년(0.07%)
 - 「ODA/GNI 비율」은 '07년도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잠정치)인 0.28%의 1/4수준
 - 1인당 ODA: '06년(9.4달러) → '07년(14.4달러)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 추이 (순지출 기준)



2.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원조형태별 ODA 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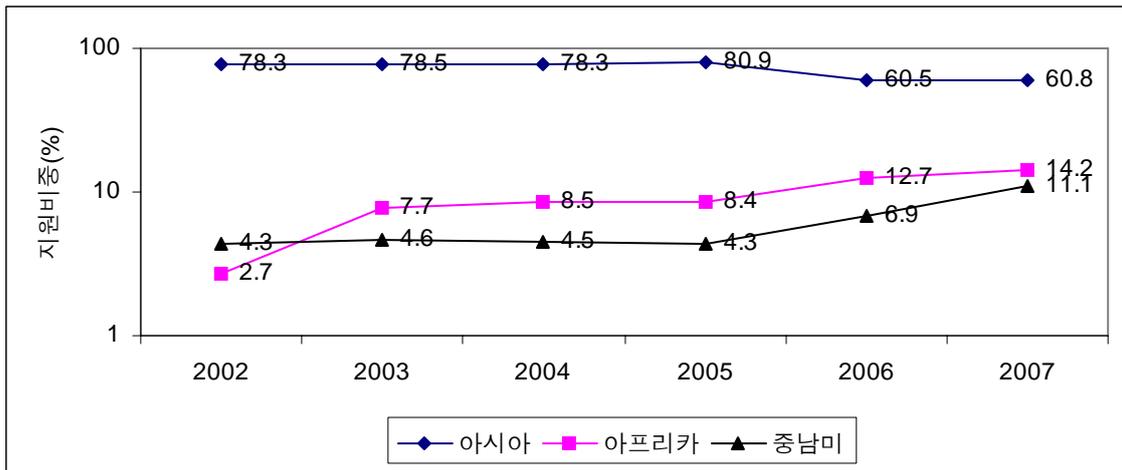
양자간 원조	무 상 원 조									유 상 원 조		
	프로젝트 원조	프로그램 원조	기술 협력	인도적 지원	NGO 지원	개발인식 증진	행정 비용	기타	소계	프로젝트 원조	기타	소계
493.47	94.79	39.52	167.03	16.97	6.60	4.50	31.43	0.43	361.28	112.19	20.00	132.19
다자간 원조	출 자 · 출 연								양허성 차관			
	UN 기구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기타	소계					
205.59	47.68	82.33	4.54	41.68	14.96	14.40	205.59	-				

- 양자간 원조는 유·무상 원조의 동반 실적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31.2% 늘어난 4억 9,347만 달러를 기록
 -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한 3억 6,128만 달러를 기록
 - 무상원조 지원 형태별로는 기술협력(46.2%)과 프로젝트 원조(26.2%)가 전체의 72.5%를 차지, 특히 기술협력은 최근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
 - 기술협력(백만 달러): '04년(53.83)→'05년(80.16)→'06년(116.78)→'07년(167.03)
 - 유상원조도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1억 3,219만 달러를 기록
 - 유상원조 규모는 전년대비 1,508만 달러 증가
 - '07년 약정(승인)액은 5억 8,420만 달러로 전년(3억 5,922만 달러) 대비 약 63% 증가하였는 바, 향후 유상원조 지출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자간 원조는 전년대비 159.6% 증가한 2억 559만 달러를 기록
 - 다자간 원조는 세계은행그룹(8,686만 달러)과 지역개발은행(5,664만 달러)에 대한 출자·출연, UN 기구에 대한 출연(4,768만 달러) 등으로 구성
 - '07년 중 세계은행그룹(IDA)에 대한 출자·출연이 다자간 원조 증가의 주요인
 - UNPKO(지원액의 4%만 ODA로 인정)에 대한 지원도 증가 ('06년 : 484만 달러 → '07년 : 1,419만 달러)

3. 지역별 ·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 '07년 전체 양자간 ODA 중 60.8%가 아시아에 지원되었으며, 아프리카(14.2%), 중남미(11.1%) 등이 그 뒤를 이음
- 양자간 ODA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은 극동아시아(52.7%), 중동(23.5%), 남부 및 중앙아시아(22.1%) 등으로 구성
- 최근 6개년간 양자간 ODA의 아시아 지역 지원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원비중은 점진적으로 상승

양자간 ODA의 주요 지역별 지원비중 변화추이 (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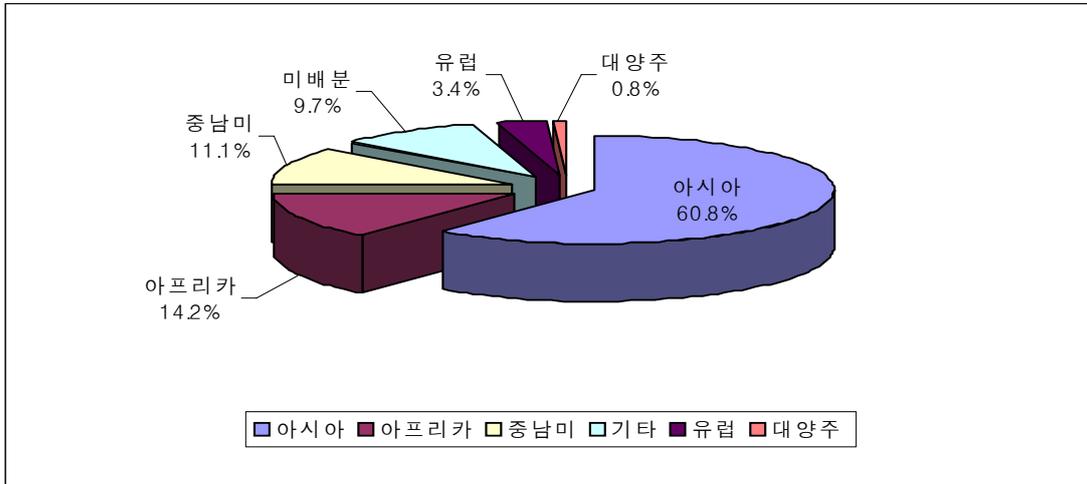
- 무상원조는 아시아(60.3%), 아프리카(14.4%), 중남미(10.3%)에 중점 지원되었으며, 유상원조도 아시아(62.2%), 아프리카(13.8%), 중남미(13.3%) 순으로 지원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대양주	미배분	합계
무상원조	217.8	51.9	37.1	2.3	4.3	47.9	361.3
유상원조	82.2	18.3	17.5	14.7	△0.6	-	132.2
합계	300.1	70.2	54.7	17.0	3.7	47.9	493.5

양자간 ODA의 지역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대한 지원이 전체 양자간 ODA의 10.9% (양자간 무상원조의 14.8%)를 차지하였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
- 이라크는 2003년 3월 전쟁발발에 따른 무상원조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우리나라 원조의 최대 수혜국을 차지
- 상위 10개국에 대한 양자간 ODA 비중은 53.1%로 전년(54.2%)과 비슷한 수준('05년 : 72.2% → '06년 : 54.2% → '07년 : 53.1%)

양자간 ODA의 국가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순위	국 가	무상원조	유상원조	합계	
				금액	비중(%)
1	이라크	53.6	-	53.6	10.9
2	캄보디아	10.6	24.6	35.3	7.2
3	스리랑카	13.8	19.5	33.3	6.7
4	인도네시아	16.5	12.3	28.8	5.8
5	필리핀	9.3	18.9	28.2	5.7
6	베트남	26.4	△1.7	24.7	5.0
7	라오스	8.7	9.2	17.9	3.6
8	앙골라	0.2	17.2	17.4	3.5
9	몽골	9.8	3.1	12.9	2.6
10	페루	10.2	-	10.2	2.1
상위 10개국 소계		159.2	103.0	262.2	53.1
기타 117개국 소계		139.7	29.1	168.9	34.2
국 별 배 분 불 능		62.4	-	62.4	12.6
총 합계		361.3	132.2	493.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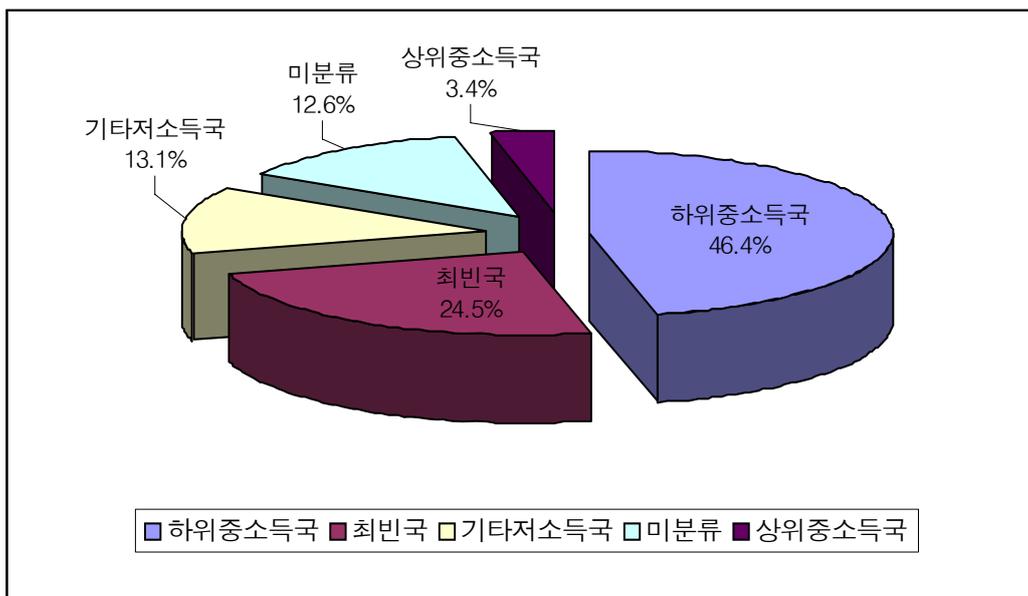
- 소득그룹별로는 하위중소득국(LMIC)에 양자간 ODA의 46.4%가 지원되었고 최빈국(LDC)에는 24.5%가 지원됨
- 전년과 비교하여 최빈국 비중은 동일하나, 하위중소득국 비중은 3.0% 포인트 감소하고 상위중소득국과 기타 저소득국비중은 각각 2.0% 및 0.2% 포인트씩 증가함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규모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최빈국 (UN지정)	기타 저소득국 (1인당 GNI <825달러)	하위 중소득국 (≤3,255달러)	상위 중소득국 (≤10,065달러)	미분류	합계
무상원조	64.9	58.8	160.7	14.4	62.4	361.3
유상원조	56.1	5.6	68.0	2.5	-	132.2
합 계	121.0	64.4	228.8	16.9	62.4	4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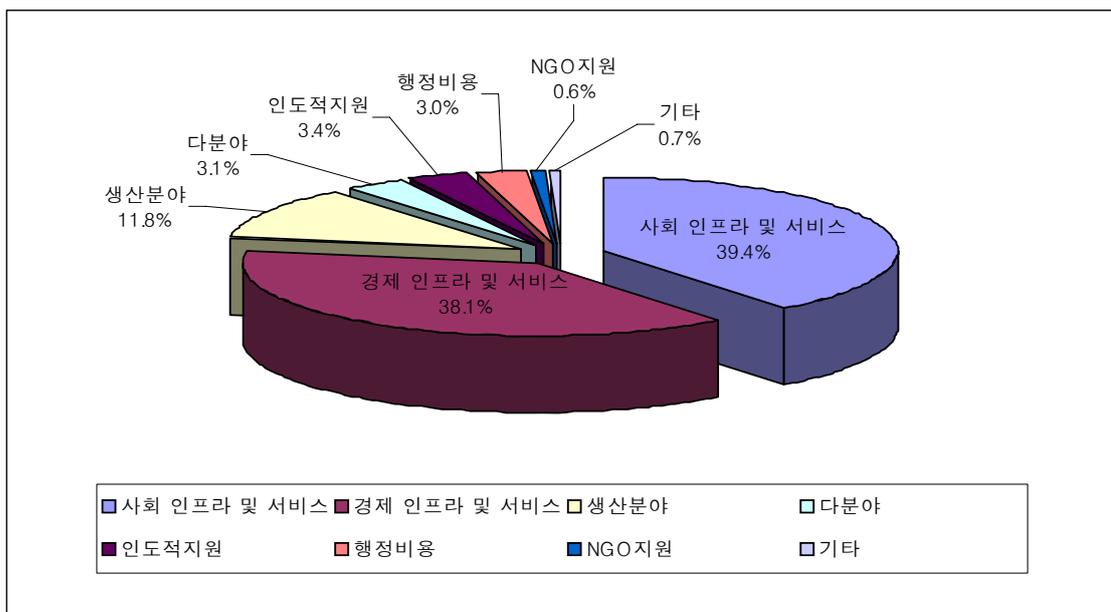
양자간 ODA의 소득그룹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4. 분야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 양자간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39.4%)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38.1%)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77.5%를 차지
-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부문이 32.7%(1억 3,601만불)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보건부문이 그 뒤를 이음
-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통부문이 58.6%(2억 3,589만불)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통신, 에너지부문이 그 다음 순
- 생산 분야는 농업·임업·수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1억 2,434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인도적 지원에는 3,551만 달러가 지원됨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비중 (약정 기준)



5. 구속성 여부별 지원규모 (약정 기준)

□ 2007년 양자간 ODA의 비구속성(Untied) 원조 비율은 24.7%로 전년 (1.9%)대비 대폭 증가

- 유상차관 현지화 소요비용의 비구속성 분류, 유상원조 최초의 비구속성 원조 지원(마다가스카르, 1,412만 달러),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원조 단계적 확대 정책에 따른 비구속성 원조 승인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양자간 ODA 비구속성 원조비율 대폭 증가

구속성 여부에 따른 양자간 ODA 지원규모 (약정 기준)

(백만 달러)

구 분		2006		20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양자간 ODA*	비구속성	10.0	1.9	199.7	24.7
	구속성	514.7	98.1	608.8	75.3
	총 계	524.7	100.0	808.6	100.0

* 기술협력 및 행정비용 제외

작성 : 김 평 석, kps1591@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2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통보 결과 분석

【요약】

-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통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전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 중 90%가, 사후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 중에서는 96%가 국제경쟁입찰원칙을 적용해, 높은 경쟁입찰 적용률을 보였음
- 사후 통보 건의 입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이 총액의 60%를 수주했으며, 수원국은 30% 정도 수주
- 수원국은 금액기준 수주 비율(31%)보다 건수기준 수주 비율(54%)이 더 높아, 소규모 프로젝트를 주로 수주했음을 알 수 있음

1.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 개요

□ 투명성 합의의 의미

- ‘언타이드 원조 투명성 합의(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는 언타이드 원조의 실질적 타이드化를 막고 원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04년 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채택된 합의
- 동 합의에 따라 ‘05 ~ ‘08년간 언타이드 원조(기술협력 포함) 입찰 정보에 대한 사전통보(사업별로 입찰 30일전까지) 및 사후통보(연1회) 실시

□ 통보 대상

- ‘투명성 합의’의 사전 및 사후 통보대상은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인 언타이드 차관과 13만 SDR 이상의 기술협력

원조형태	통보대상
언타이드 차관	지원금액이 5백만 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미만
기술협력	13만 SDR 이상의 투자연계기술협력*

* 투자연계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기술협력으로서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설계지원(FEED), 건축엔지니어링지원(A&E),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을 말하며 특정 프로젝트의 준비 또는 수행과는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ree 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 FTC)과는 구분됨

□ 통보 내용

- 사전통보 : 프로젝트 금액(승인액), 프로젝트 개요, 입찰정보, 구매주관기관, 차관금액 및 지원조건 등
- 사후통보 : 사전통보 ID 및 계약금액, 수주기업 등 원조사업의 수주결과

2. 사전 통보 결과

□ 사전 통보 규모

- '05 ~ '08년(상반기)간 총 9개국이 197억 SDR (약 USD 300억불), 314건의 언타이드 차관(기술협력 포함)을 사전 통보
- 사전 통보 대상 원조의 최대 공여국은 일본으로, 동 기간 동안 163억 SDR, 185건 공여

사전 통보 규모('05 ~ '08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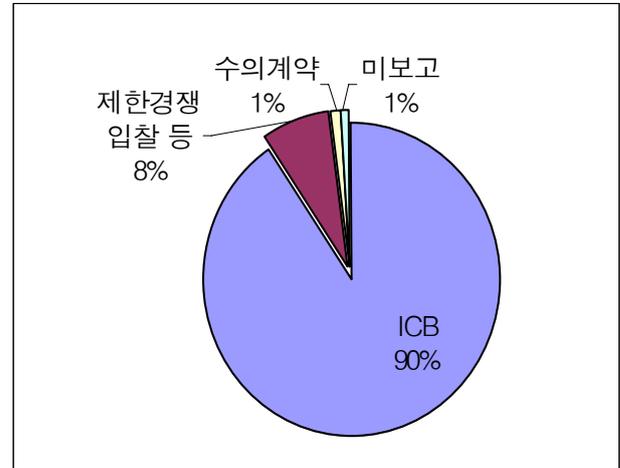
(SDR백만, 건)

	2005		2006		2007		2008(상반기)		합계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일본	2,977.0	41	2,729.8	39	7,426.3	73	3,154.7	32	16,287.8	185
프랑스	213.6	7	356.0	14	538.9	23	306.7	10	1,415.2	54
독일	237.7	6	252.9	9	243.4	8	167.7	4	901.7	27
네덜란드	50.7	2	439.3	21	135.5	7	37.3	2	662.8	32
스페인	186.8	2	33.2	4	5.3	1	9.4	1	234.7	8
덴마크					91.5	1			91.5	1
이탈리아					67.9	2			67.9	2
오스트리아	28.8	1							28.8	1
노르웨이	3.3	1			4.8	2	4.4	1	12.5	4
합계	3,697.9	60	3,811.2	87	8,513.6	117	3,680.2	50	19,702.9	314

□ 입찰 방식

- '05 ~ '08년(상반기)간 사전
통보된 언타이드 원조 중 **90%**는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방식을 적용

사전 통보건 입찰 방식
('05 ~ '08 상반기, %)



3. 사후 통보 결과

□ 사후 통보 결과

- '05 ~ '07년 사후 통보 결과, 사전 통보
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8개국에서 **31
억 SDR, 277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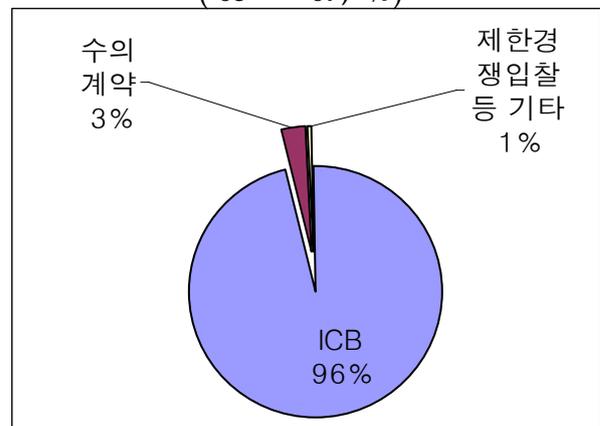
* 승인 금액을 보고하는 사전 통보와는 달리, 사후 통보는 개별 계약 금액을 보고하므로 사전 통보 사업 1건에 다수의 사후 통보건이 존재

- 사전 통보건과 사후 통보건의 ID를 매치시킨 결과, '05 ~ '07년 사전 통보된
사업 중 36%가 사후 통보되었음
- '05년 사전 통보건 중 75%, '06년 사전 통보건 중 40%, '07년 사전 통보
건 중 12%가 사후 통보되었음

⇒ 입찰 과정에 평균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사후 통보건의 96%가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

사후 통보건 입찰 방식
('05 ~ '07, %)



□ 입찰 수주 현황

○ 입찰 수주국을 분석한 결과, 수원국은 금액기준으로 31%의 계약을 수주했으며, 공여국은 24% 수주

- 수원국(31%), 공여국(24%), OECD 국가*(36%), 기타(9%)

* OECD 국가 중 수출신용협약 참가국만 해당(EU회원국 및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입찰 수주 결과('05 ~ '07)

(SDR백만, %)

	공여국		수원국		국제컨소시움		OECD 국가		기타		전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규모	건
ICB	691.2	85	939.5	146	9.4	3	1,067.6	22	294.6	15	3,002.3	271
수의계약 (Single Tendering)	55.7	3					37.1	1			92.8	4
제한경쟁입찰 등 기타			16.8	2							16.8	2
합계	746.9 (24.0%)	88	956.3 (30.7%)	148	9.4 (0.3%)	3	1,104.7 (35.5%)	23	294.6 (9.5%)	15	3,111.9 (100%)	277

○ 건수 기준으로는 수원국이 54%를 수주

- 수원국(54%), 공여국(31%), OECD 국가(8%), 기타(6%)

⇒ 수원국은 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54%에 이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31%를 차지한 반면, OECD 국가는 적은 건수 기준 비중에도 불구하고, 금액 기준 36%를 차지함. 수원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계약을 주로 수주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07년 사후통지 결과, 건당 계약 규모가 수원국은 평균 670만 SDR임에 비해 OECD 국가는 7,900만 SDR 수준임

일본 언타이드 원조의 낙찰자별 건당 평균 계약 금액('07)

(SDR백만)

낙찰자	일본	수원국	컨소시움	OECD	기타	전체
평균 계약금액	21.6	6.7	24.1	79.0	53.4	20.4

4. 시사점

- '투명성 합의' 참가국의 국제경쟁입찰 원칙 준수
 - 사후 통보 결과, 국제경쟁입찰 적용률이 9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 '투명성 합의' 참가국은 국제경쟁입찰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진국의 높은 수주 비중
 - 사후 통보 결과를 통해 언타이드 입찰 수주국 현황을 파악한 결과, 금액 기준으로 선진국의 수주 비율이 60% 수준이며, 수원국은 30% 정도 수주
 - 공여국 및 OECD 국가 전체의 비중이 금액기준으로 60%에 이르며, 특히 공여국은 24%를 수주
- 수원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계약 수주
 - 입찰 결과 수원국은 건수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을 수주했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3 수준을 수주하는데 그침
- '투명성 합의' 통보 내용 분석의 한계 존재
 - 사전 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한 '07년 자료의 12%만 사후 통보되어, 최근의 언타이드 입찰 현황의 완전한 파악이 불가능
 - '투명성 합의'는 '08년말 만료될 예정으로, 합의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07년도 자료 중 아직 사후 통보 되지 않은 건의 결과 분석이 불가능
 - 현재 미국이 동 합의의 기한 연장을 OECD 앞 요청한 상태로, 기간이 연장될 경우 다년도 자료를 통해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
 - 또한, 동 합의 통보 대상의 금액 제한(5백만 SDR 이상) 및 양허성 제한(80% 미만)으로 인해 부분적인 정보 분석만 가능하여, 향후 동 합의가 지속될 경우 제한을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음

자 료 : 2008 Mid-year Review : 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 Transparency
(TAD/PG(2008)18/PROV, OECD, 2008. 10.)

작 성 :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

EDCF 소식

2008년 3/4분기 EDCF 소식

1. 2008년 3/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베트남 비엠허 하수도 건설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푸토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41.3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2.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로 설치(실시설계, 구매관리 및 시공감리 포함), 시운전 및 운영 관리자 교육 등
- 사업개요
 - 신흥공업도시인 비엠허시에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정부가 2008년 4월 차관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해 공공수역에 방류되는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수질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홍강(Hong River)과 로강(Lo River)의 수자원 활용도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라이짜우성 종합병원 개선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라이짜우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15.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의료기자재 공급 및 검수, 기자재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현재 신축 중인 라이짜우성 종합병원에 의료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라이짜우성 및 인근 주민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보건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 4월 베트남 정부가 차관신청서 제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원현대화사업(2차)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합 보건부)
- 총 사업비용 : 62.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50.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전국 소재 27개 국립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MRI, CT 및 초음파 시스템 등 15개 종의 최신식 의료장비 공급 등
- 사업개요
 - 낙후된 병원에 최신의 주요 진단 및 일반 의료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병원 현대화를 꾀하고, 환자의 진단 및 치료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차관신청서를 접수

□ 스리랑카 Padeniya~Anuradhapura 도로 개선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스리랑카 정부 (스리랑카 도로개발부)
- 총 사업비용 : 7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55.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스리랑카 중북부지역의 Padeniya ~ Anuradhapura 구간 도로(연장 80.8km)를 2차선 도로로 확장, 교량 확장 및 신설,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사업개요
 - 스리랑카 중북부지역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Padeniya ~ Anuradhapura 구간(80.8km) 도로의 성능 개선으로 지역간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스리랑카 정부의 차관지원 신청
 - Bandaranaike 국제공항으로부터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북부지역과의 여객운송을 원활히 함으로써 스리랑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임

□ 요르단 암만남부 폐수처리사업(2차)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요르단 정부 (요르단 수도청)
 - 총 사업비용 : 93.7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74.6백만 달러
 - 사업범위 :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로 설치(실시설계, 구매관리 및 시공감리 포함), 시운전 및 운영 관리자 교육 등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1차 사업(2004 승인)*과 마찬가지로 요르단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암만 남부 북서부 및 남쪽지역에 추가로 폐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차관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해 사업실시지역의 주민들의 위생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하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통한 식수 수질 개선, 관개용수 재활용을 통한 신규 농업용수원 개발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가 기대됨
- * EDCF의 지원으로 암만 남부 북동지역에 용량 12,037m³/일 규모의 폐수처리 시설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세네갈 정부 행정망 구축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세네갈 경제재정부 (국가정보처)
- 총 사업비용 : 32.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세네갈 전국 35개 주요도시의 665개 정부부처 사무실 등에 무선 정부행정망 및 LAN(Local Area Network) 구축. 그 외 운영·유지보수(O&M) 제공, 교육훈련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세네갈 35개 지역의 665개 관공서 등에 무선 행정망을 구축하고, 수도 다카르에 2대의 LED Display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원국 행정부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대 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이용한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2006년 7월 세네갈 정부의 차관신청 및 2007년 4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베트남 닥농성 종합병원 의료기 기자재 공급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닥농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6.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5.7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의료기자재 공급 및 검수, 기자재 사용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닥농성의 신축 종합병원에 현대적인 의료기자재를 공급함으로써,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질병예방 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임
 - 2007년 6월 베트남 정부의 차관신청 후 2007년 11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2차)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니카라과 정부 (니카라과 상하수도공사)
- 총 사업비용 : 19.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5.9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본건 1차 사업장에 펌프설비 4대 추가 공급, 정수장 증설, 배수지 증설, 신규 가정급수전 연결 등
- 사업 개요
 - EDCF의 지원으로 1차 건설된 후이갈파 상수도시설의 취수시설 용량 확대 및 정수·배수시설의 증설을 위해 실시하는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정부지원방침 결정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8. 9.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승 인*	집 행	기금조성(누계)
2005년	3,219	1,643	17,586
2006년	3,523	1,361	19,238
2007년	5,542	1,553	21,169
2008년(9월말)	3,711	905	21,395

* 2008. 9. 30자 환율 (₩1,231.69/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3개국 181개 사업, 3조 8,584억 원 ('08 : 6개국 9개 사업, 3,711억 원)
- 집행 : 38개국 144개 사업, 1조 8,637억 원 ('08 : 17개국 41개 사업, 905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8.9)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25,261	65.5%	12,548	67.3%
유 럽	4,027	10.4%	2,456	13.2%
아 프 리 카	4,469	11.6%	1,934	10.4%
중 남 미	2,545	6.6%	1,049	5.6%
중 동	2,114	5.5%	569	3.1%
대 양 주	169	0.4%	82	0.4%
합 계	38,584	100%	18,637	100%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 인		집 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10,866	28.2%	5,014	26.9%
통 신	4,442	11.5%	3,220	17.3%
에 너 지	3,569	9.3%	2,184	11.7%
수자원, 위생	6,858	17.8%	2,128	11.4%
환 경 보 호	235	0.6%	148	0.8%
보 건	3,879	10.1%	1,891	10.1%
교 육	3,539	9.2%	1,371	7.4%
공 공 행 정	2,347	6.1%	1,296	7.0%
농 수 입	1,877	4.9%	719	3.9%
기 타	971	2.5%	668	3.6%
합 계	38,584	100%	18,637	100%

작 성 : 구 남 희, kooik99@hotmail.com
안 미 보, miboahn@koreaexim.go.kr

목차보기